

연구총서 00-26

•

북한체제의 정치적 특성과
변화전망

전 현 준

통 일 연 구 원

요 약

북한은 사회주의권 붕괴나 경제난에도 불구하고 김정일을 중심으로 더욱 단결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지난 6월 남북 정상회담시 보여준 김정일의 행동은 거의 '신적 권위'를 방불케 하였다. 본 연구는 북한의 정치적 특성을 '종교정치'체제로 상정하여 북한의 현 상황을 종교정치적 입장에서 분석하고 향후 체제변화를 전망해 보고자 한다.

1. 종교정치에 대한 일반적 고찰

가. 종교정치의 구성요소

뒤르켐(Durkheim)은 모든 종교는 사물을 두 개의 반대집단 즉, 성스러운 것(the sacred)과 세속적인 것(the profane)으로 구분한다고 보았다. 아울러 그는 모든 종교는 서로의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세 가지의 보편적 요소를 포함한다고 주장한다. 첫째, 이론적 요소인 믿음체계(belief system), 둘째, 실천적 요소인 의식체계(ritual system), 셋째, 사회적 요소인 사회관계의 체계가 있다는 것이다. 위와 같은 요소를 참조하여 종교정치의 조작적 정의(operational definition)를 내려보면 종교정치란 “정치가 믿음의 대상으로서 교주와 절대이념을 보유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儀式과 사회관계를 보유함으로써 종교화된 상태”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나. 정치의 종교화 배경

정치지도자는 자기 권력을 절대화하려는 욕망을 가진다. 권력의 절대화 목적은 어느 누구도 자신의 권력에 도전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소위 전체주의 내지 나찌즘의 국가체제 및 공산주의의 그것은 이같은 정치의 유사종교화의 산물이었다. 결국 정치가 종교화되는 이유는 지배자가 주민이나 관료의 반항을 억제하고 자신의 권력을 영구화하기 위해 자신을 ‘신’이나 ‘신이 선택한 자’로 규정하기 때문이다. 북한에서 정치가 종교화된 내용을 구체화해 보면 다음과 같다. 해방 이후 및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북한주민들은 가난과 ‘外侵’으로부터 보호해 줄 강력한 지도자를 원하게 되었다. 남한과는 달리 북한에는 변변한 외국원조도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구원자에 대한 열망은 더욱 컸다. 북한주민들은 자신을 구원해 줄 대상으로 김일성을 꼽았고 김일성은 이것을 역이용하였다. 김일성은 자신이 ‘구원자’임을 자임하였고 ‘수령’을 칭하였다.

2. 북한체제의 종교정치적 고찰

가. 북한체제의 종교정치화 과정

북한체제는 다양하게 성격지워질 수 있을 것이나 김일성 사망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유일신교에서나 가능한 ‘김일성 영생론’을 주창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종교정치 국가’로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즉 북한의 수령 유일지배 체제는 ‘종교정치적’ 권력구조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김일성 사망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1998년 9월 5일 헌법수정을 통해 북

한은 김일성을 ‘영원한 주석’으로 옹립, 교주 김일성의 불멸성 (immortality)을 확립하였다.

일반적으로 종교의 기본요소는 교주, 성경, 찬송가, 성소, 예배 등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김일성(교주)에 대한 맹신(믿음), 주체사상(성서), 우상화 가요(찬송가), 주간총화(예배), 당원(신자) 등은 북한의 ‘종교국가적’ 요소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세속화가 시작된 이후 북한은 세속화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다양한 권력구조를 도입하여 왔는 바, 1998년 9월 5일 국방위원장 체제를 도입함으로써 ‘救世軍’적 권력구조를 도입하였다.

기본적으로 북한 권력구조는 수령(=교주)유일지배 체제로서 수령은 인민들에게 ‘사회정치적 생명’을 부여한다고 주장될 만큼 신성시되고 있다. 수령은 무오류, 무결점, 무부패의 인간으로서 인민들에게 ‘사회정치적 생명’을 부여해 준 절대자로 선전되고 있다. 따라서 수령의 권위는 신성하고 누구도 이에 대항할 수 없는 신적인 존재이고 이의 교리인 주체사상은 절대적인 중심가치체계(central value system)이다.

수령은 신성성 유지를 위해 인민들이 지속적으로 예배하도록 만들고, 성서인 주체사상을 이탈할 경우 가혹한 처벌을 단행한다. 인민들은 물론 특히 관료(=사제)들은 권력 그 자체인 수령에게 절대 복종해야 하고 누구나 수령을 모범으로 삼아 건설하고 청빈하게 생활해야 할 의무를 보유하고 있다.

북한은 ‘김일성교’의 세속화를 위해 당과 사회단체 등 각종 전위기구를 설립하였다. 세속화의 도구가 되는 각종 기구들은 수령의 요청에 의해 언제든지 변경될 수 있고 여기에는 어떤 典型이 있을 수 없다. 따라서 어떤 비정상적 기구이든 그것은 수령의 권위를 제고하기 위한 목적에서 설립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현재 북한의 최고 세속권력은 국방위원장에게 있다. 국방위원장은

헌법상 ‘국방사업 전반을 지도’하도록 되어 있고, 이는 북한이 이미 ‘구세군’적 군조직 체제로 전환되었음을 의미한다.

나. 종교정치로서의 수령제

통치 권위를 조직이나 직이 아닌 자연인의 신성에서 갖게 되면 그 정치 체제는 이미 신정 체제로 된다. 보통사람은 그 누구도 그 신성을 나누어 가질 수 없으므로 지배자의 지위를 승계 할 수 없으며, 오직 그 신성의 권위를 빌어 신성을 대표하는 사람이 위임한 사람만이 통치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이다.

북한이 김일성의 신성을 지배 권위의 원천으로 하는 신정 국가이기 때문에 김정일은 오직 김일성의 권위로 통치할 뿐이다. 비유하자면 그리스도는 자기의 권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로 인간을 영적으로 지배하는 것이지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승계’한 것이 아닌 것과 마찬가지로 ‘유훈통치’가 아직까지 지속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1당 독재를 실시하고 있는 조선노동당은 “오직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주체 사상, 혁명 사상에 의해 지도된다”고 못박고 있다. 따라서 누가 당의 새로운 지도자가 되더라도 당의 지도노선을 바꿀 수 없게 되어 있다. 종교에서 신의 교리에 해당되는 것이 김일성의 주체 사상, 혁명 사상이므로 누가 당의 수령직을 계승하더라도 수령의 직을 넘는 절대적 권위로서의 김일성 ‘말씀’을 따르도록 규정되어 있다. 새로운 당수나 당 간부는 오직 김일성교의 ‘사제직’을 수행할 수 있을 뿐이다.

이제 북한은 김일성을 신격화하였고 김일성주의 경전을 갖추었으며 노동당이라고 하는 사제단을 가진 ‘유사’ 종교 단체로 되었다. 북한은

단순한 전체주의 사회가 아니다. 전통적 의미의 사회주의 국가도 아니다. 이제 김일성이라는 유일신을 가진 종교 국가로 되었다. 북한 사회의 이러한 종교 국가적 특성을 이해하지 않으면 오늘의 북한 사회를 이해하기 어렵다. 북한의 정치도 사회도 문화도, 그리고 북한의 대외 관계도 북한의 종교 국가적 특색을 전제하지 않고는 쉽게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신정 국가로서의 북한 사회의 특색은 통치권의 포괄성에서 찾을 수 있다. 통치자는 인민의 정치 생활만을 간여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인민의 물질적 생활, 문화 활동 등 모든 영역을 지배한다. 뿐만 아니라 인간의 내면적 정신 세계까지 통제한다. 그런 점에서 북한은 역사상 어느 전체주의보다도 더 철저한 전체주의 전제 사회로 굳어졌다고 할 수 있다. '수령님의 뜻에 따라 생각하고 수령님의 뜻에 따라 일하고 수령님의 뜻에 따라 죽는' 사람들로 구성된 사회가 북한 사회이다.

3. 북한체제의 종교정치화 실태

가. 이념·정치 분야

김일성과 김정일은 '신'과 '신의 후계자'로 되고 절대복종의 대상으로서 '혁명적 수령관'이 확립되었다. 특히 '사회정치적생명체'론은 수령을 '신'으로 만드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였다. 주체사상과 이에서 도출된 '당의 유일사상체계확립의 10대원칙'은 '성서화'되었다. 그리고 김일성의 사망에도 불구하고 그는 영생한다는 '영생론'의 등장은 김일성이 종교지도자로 변모했음을 확인해 주는 역할을 하였다. 물론 이외에도

‘사회주의대가정’론, ‘육친적 배려,’ ‘어버이,’ 충성과 효성, 의리 등 ‘유교적’ 특징, ‘단군시조론,’ ‘김일성 민족,’ ‘수령복’ 등 ‘민족종교’적 측면, ‘총폭탄 정신,’ ‘21세기의 태양’ 등 일본 천황제에서 나온 군국주의적 요소 등 김일성의 절대성을 강조한 종교적 요소들은 무수히 많다.

나. 군사분야

북한은 수령제라는 신정체제 옹위를 위해 각종 대량살상 무기를 보유하고 있다. 강력한 군사력만이 수령제를 유지하는 근간이라는 논리이다. 북한이 로켓개발을 지속하는 이유가 경제적 이득과 과학기술 발전을 동시에 이룰 수 있기 때문이라는 김정일의 설명 외에도 수령체제의 가장 큰 위협세력 즉, Satan인 미국과의 협상 지렛대 확보에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북한이 로켓발사를 중지할 이유는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비록 김정일이 “위성을 대신 쏘주면 로켓개발을 안하겠다”라고 ‘웃는 얘기’로 푸틴 대통령에게 제의했다고 설명했지만 그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향후 수령제 유지를 위한 미사일 개발은 지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다. 경제분야

외부세계를 ‘악마화’하여 철저히 폐쇄적 경제체제를 유지한 북한은 주체경제론에 입각, 자력갱생을 경제정책의 모토로 삼았다. 그러나 그 결과는 수백만명의 아사자를 남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체신도들’은 이교도와의 전쟁이 아니라 자신의 교주의 오도로 인해 무가치한 죽음을 맞이한 것이다. 중앙배급체계가 무너지고 노동자와 산간지역 주민

들은 식량구입을 위해 탈북하든지 아니면 떠돌아다니는 신세가 되고 있다. 북한의 공식경제는 거의 마비상태에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분석이다. 공장가동률이 20%이하대로 떨어져 있고, 중앙통제경제는 작동을 멈추고 있다. 다만 돌격대에 의한 고속도로 건설, 토지정리사업, 중·소형발전소 건설, 1호 협동농장에서의 농사 등이 이루어지고 있을 뿐이다.

결국 이와 같은 밑바닥의 경제상황과 민심은 김정일을 경제문제에 주력하도록 압박하였다. ‘교주’로서의 위신제고를 위해 김정일은 ‘강성대국 건설’이라는 ‘천년왕국’의 꿈을 제시하였다.

라. 사회분야

김일성 개인에 대한 신격화는 주민들의 이성을 마비시켰다. 절대자에 대한 절대적 복종만이 미덕이 되었고 유사시에는 수령을 위해 일본의 ‘가미가제’처럼 ‘총폭탄’이 되겠다는 믿음을 과시하고 있다. 수령의 지시대로만 움직이면 ‘천년왕국’에 갈 수 있으리라는 희망을 안고 북한주민들은 열심히 봉사하며 묵묵히 살아 왔다. 그러나 ‘유일사상체계 확립 10대원칙’을 밤낮으로 묵시하며 산 결과는 가난이었다. 중앙배급체계가 붕괴됨에 따라 개인들은 스스로 식량을 찾아 헤매야 한다. 그러나 그들은 누구에게도 불평하지 않는다. 만일 불평하면 천벌을 받는다고 그들은 생각하기 때문이다. 오히려 북한주민들은 ‘유일신’인 김일성의 사망에 눈물을 흘리고 ‘고난의 행군’을 성실히 수행해내고 있다.

북한주민들은 가난의 원인이 ‘악마’인 미국의 대북 제재 때문으로 생각한다. 따라서 미국의 대북제재만 해제되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

라는 믿음을 갖고 있다. 나아가 통일만 되면 수령제에 대한 위협이나 가난이 모두 사라질 것으로 북한주민들은 기대한다. 그들이 통일을 확고고대하고 남북 정상회담을 열렬히 환영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4. 북한체제 변화 전망

가. 변화의 수준

북한의 전통적인 대남전략은 '대남 적화전략'이었으나 1960년대부터는 평화공존논리인 연방제로 변경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1980년 『고려민주연방공화국창립방안』이 제창된 이후로는 대남혁명을 통한 '체제확산' 전략이 평화공존을 통한 '체제유지' 전략 즉, '연방제통일전략'으로 전환된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남북정상회담을 비롯한 각종회담과 이를 통한 남북화해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연방제통일전략'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현재 북한의 전향적인 대남 및 대외정책은 '전술과 정책'의 측면이라고 판단되는 바, 북한의 전술은 김대중 정부의 대북 포용정책을 활용한 '최상층 통일전선전술'인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정상회담을 포함해 각종 대남 포용정책을 구사하는 이유는 김대중 정부의 대북 포용정책을 1997년 김정일의 '8·4로작'을 통해 남한에게 '연북화해정책'을 촉구한 것에 대한 화답으로 인식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나. 변화의 주체

현재 북한변화의 주체는 '제2의 교주'이자 '수령후계자'로서 절대권

을 보유하고 있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다. 앞에서 고찰된 바와 같이 북한체제는 수령 유일지배 체제로서 수령은 '神權'에 가까운 절대권을 보유하고 있고 김정일은 수령 후계자로서 수령에 버금가는 권한을 보유하면서 독자적 판단에 의해 당·정·군 관료와 인민들을 지도하고 있다. 이로 인해 북한의 당·정·군 엘리트나 인민들은 김정일 정책의 충실한 '전도사'일뿐 현재까지는 변화의 주체가 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경제난의 직접적 피해자는 인민들이고 이들의 불만이 각종 경로를 통해 김정일에게 전달되었을 것이기 때문에 향후에도 인민들은 김정일의 정책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개방을 통해 인민들의 대김정일 충성심이 강화된다면 개방은 더욱 확대될 것이다.

다. 변화의 방향

당분간 북한은 인민들의 사상적 동요가 없다는 자신감이 있을 때까지는 제한적 개방만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남북정상회담 수락, 대남 비방 중지, 개성지역 개방 등 대외분야에 국한된 것이기는 하지만 북한변화의 속도는 급진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북한은 대외관계 개선 속도와는 달리 대내문제에 대해서는 매우 완만하고 점진적인 변화를 채택하고 있다.

라. 변화 전망

'주체종교'를 회생시키기 위한 전술에서 발로된 것이기는 하지만 김정일의 변화는 등소평이나 고르바초프의 그것처럼 '위로부터의 변화'

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기본적으로 사회주의체제는 고수하지만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적 요소를 과감히 수용하는 형태이다. 현재로서는 김정일의 변화 범위와 방향을 정확히 예측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신권’을 보유한 김정일에게는 어떤 제한도 통할 수 없기 때문이다. 물론 이에 대한 의구심도 없지 않다. 김정일의 행보는 노선 및 전략의 변화 또는 ‘추세’가 아니라 전술의 변화나 ‘일회성 사건’에 불과하다는 주장이 그것이다.

그러나 김정일은 이미 ‘세속화’를 위해 마지막 선택을 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비록 단기적으로는 과거로 역행하는 행동을 취할지 모르지만 이미 전진한 행적은 지워질 수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언젠가는 전진했던 길로 재전진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5. 결 론

북한은 ‘주체종교국가’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수령 김일성은 ‘교주’이고 김정일은 ‘제2의 교주’이다. 주체사상은 ‘성서’이고 김일성과 김정일을 위한 노래는 ‘찬송가’이다. 권력엘리트들은 ‘사제’이고, 주민들은 ‘신도’이다. 따라서 신도인 주민들은 김일성 교리를 의심하면 안되고 절대로 믿어야 한다. 물론 북한의 ‘종교국가’적 체제는 특정한 종교적 색채만 내포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사회주의대가정’론, ‘육친적 배려,’ ‘아버이,’ 충성과 효성, 의리 등 ‘유교적’ 특징, ‘단군시조론,’ ‘김일성 민족,’ ‘수령복’ 등 ‘민족종교’적 측면, ‘총폭탄 정신,’ ‘21세기의 태양’ 등 일본 천황제에서 나온 군국주의적 요소 등이 혼재된 상태가 북한체제의 특징이다. 다만 공통적인 것은 모두 종교적 요소들이라는 점이다.

- 목 차 -

I. 서론	1
1. 연구 목적	1
2. 연구 방법	3
II. 종교정치에 대한 일반적 고찰	5
1. 종교정치의 구성요소	5
2. 정치의 종교화 배경	6
III. 북한체제의 종교정치적 고찰	8
1. 북한체제의 종교정치화 과정	8
2. 종교정치로서의 수령제	10
IV. 북한체제의 종교정치화 실태	37
1. 이념·정치 분야	37
2. 군사분야	38
3. 경제분야	39
4. 사회분야	42
V. 북한체제 변화 전망	45
1. 변화의 수준	45
2. 변화의 주체	48
3. 변화의 방향	50

4. 변화 전망	50
VI. 결 론	56
참고문헌	59

표 목 차

<표 1> 분야별 주요 권력엘리트	35
--------------------------	----

I. 서론

1. 연구 목적

지난 6월 남북 정상회담에서 보여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하 직책 생략)의 행동은 그 동안의 일반적 예상을 초월한 것으로서 서방세계가 가졌던 선입관을 반전시키기에 충분하였다. 그 동안 김정일의 행동은 철저히 베일에 가려져 왔기 때문에 충분하지는 않지만 금번의 기회가 김정일과 북한체제의 특성을 파악하는데 많은 도움을 준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당연한 주장이지만 김정일에 대한 이해증진이 그의 행동을 정당화시켜주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우리는 유념해야 할 것이다.

정상회담시 김정일은 상황을 주도하면서 마치 ‘帝王’처럼 행동하였다. 조명록, 김용순 등을 비롯한 그의 참모들은 왕조시대의 신하처럼 김정일을 보위하는데 최선을 다하였고, 주민들은 김정일을 ‘광신적’으로 추앙하였다. 이를 통해 김정일이 북한내에서 만큼은 종교지도자에게서나 발견할 수 있을 정도의 절대적 지위를 누리고 있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김정일의 전임자인 김일성 주석은 자신의 권력을 절대화하는 차원을 넘어 종교적 차원으로 끌어 올렸다. 김일성의 지시는 교리화되었고 누구나 무조건 따라야 하는 율법이 되었다. 수령의 교시를 무조건 준수해야 하는 ‘무조건성의 원칙’은 ‘당의 유일사상체계 확립의 10대원칙’을 통해 북한주민의 생활양식으로 자리잡았다. 더구나 김일성은 ‘사회정치적생명체’의 ‘최고뇌수’로서 주민들의 ‘사회정치적 생명’을 좌우하는 ‘現人神’으로 추앙 받고 있는 실정이다.

‘육체적 생명’을 좌우할 수 있는 신처럼 ‘사회정치적 생명’을 좌우할

2 북한체제의 정치적 특성과 변화 전망

수 있는 수령 김일성은 신 그 자체인 것이다.¹⁾ 김일성은 신이기 때문에 누구나 그를 ‘무조건’ 믿고 추종해야 한다는 논리가 강조된다. 정치가 종교화(religionized politics)된 것으로 보아도 무방할 정도이다.²⁾

보다 자세히 말하면 ‘영생론’과 같은 기독교적 요소, ‘사회주의대가정’론, ‘육친적 배려,’ ‘아버이,’ 충성과 효성, 의리 등 ‘유교적’ 특징, ‘단군시조론,’ ‘김일성 민족,’ ‘수령복’ 등 ‘민족종교’적 측면, ‘총폭탄 정신,’ ‘21세기의 태양’ 등 일본 천황제에서 나온 군국주의적 요소 등이 혼재된 상태가 북한체제의 특징이다. 다만 공통적인 것은 모두 종교적 요소들이라는 점이다. 이러한 모든 것들은 정상적인 체제에서는 물론 일반적 독재체제에서조차도 찾아보기 힘든 독특한 요소들이다.

김일성이 누렸던 수령의 지위는 김정일로 전수되었다. 김정일은 김일성과 동일시 되고 있다. ‘김일성=김정일’이라는 주장이 일반화되어 있고 김정일은 ‘21세기 수령’으로 추앙되고 있다. 경제난으로 인해 수십만명이 아사³⁾하는 가운데서도 김정일 권력이 공고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북한주민들은 비록 내면적으로는 대항의지를 보유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을 표출시킬 만한 반항의식과 조직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있고 목숨보유를 위해 김정일에게 충성을 다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김정일의 성공적인 사상 및 조직 통제 때문⁴⁾이라 할 수 있을 것

1) 남북정상회담 준비접촉 단장이었던 김영성은 지난 9월 24일 남측 백두산관광단들에게 “수령없고 눈문바다가 되었는데 강제로 내몰았다고 했습니다. 강제로 눈물흘릴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믿고 있던 아버지같은 분이 돌아가셨는데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있습니까?”라고 말하여 북한주민들이 수령의 죽음을 아버지의 죽음으로 생각하고 자발적으로 울부짖었음을 강조했다. 『한겨레신문』, 2000.10.3; 북한의 특성에 대한 자세한 분석은 이우정, “북한의 권력승계 이론과 실제,” 이상민 외, 『21세기의 남북한 정치』 (서울: 한울, 2000), p. 218 참조.

2) 정치의 종교화에 대한 대표적인 연구는 Robert N. Bellah, *Tokugawa Religion* (Ill. Glencoe: The Free Press, 1957); 山本和, 이준식 역, 『政治와 宗教』 (서울: 한국기독교문화원, 1980) 등임.

3) 황장엽, 『나는 역사의 진리를 보았다』 (서울: 한울, 1999), p. 286.

이다. 북한은 사상통제를 통해 김일성·김정일에 대한 도전은 최악이고, 천벌을 받을 일이라고 세뇌하고 있다.

한편 일본 모리 총리는 지난 5월 15일 “일본은 천황중심의 신의 나라”라고 발언하여 파문을 일으켰다.⁵⁾ 대표적인 근대국가이고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일본에서 ‘신의 나라’ 파문이 일고 있는 것은 아직도 일본에는 ‘종교국가’적인 색채가 강하게 남아있다는 증거이다. 일본은 천황을 통해 국민통합과 단결을 도모하고 있다. 하물며 전근대적인 국가인 북한에서 ‘종교성’을 통해 주민을 통제하려는 일련의 움직임이 있다는 것은 하등 이상한 일이 아닐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인식적 기초하에 본 연구는 북한이 사회주의권 붕괴나 경제난에도 불구하고 붕괴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며, 왜 최근에는 대외개방에 정책적 역점을 두는지, 그리고 향후 북한체제는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등에 대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

2. 연구 방법

1950년대 이후 북한은 ‘자주’를 기조로 한 주체사상을 지배이데올로기로 채택, 독특한 폐쇄체제를 유지함으로써 경제를 피폐화시켰고 김일성·김정일은 봉건잔재의 청산이라는 구호와 달리 국가를 ‘사이비종교’식으로 운용하여 주민들을 질곡으로 빠뜨렸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회주의권 붕괴, 김일성 사망, 극심한 자연재해로 인한 식량난 등 총체적 재난이 발생하였고 대다수 북한전문가들은 북한조기붕괴를 예상

4) 지난 9월 22일부터 28일까지 백두산관광단 일원으로 북한을 방문한 황태연 교수도 “신적 존재로서의 수령중심으로 철저히 잘 조직돼 주민들의 삶속에 확고하게 정착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증언하였다. 『한겨레신문』, 2000.10.4.

5) 『조선일보』, 2000.7.6~7.12.

4 북한체제의 정치적 특성과 변화 전망

하였으나 북한에는 대규모 주민폭동, 권력핵심층의 반항 등 체제변화 징후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사실 북한내 체제변화 움직임이 없는 이유에 대한 정확한 원인규명이 없는 상태에서의 통일방안 제시나 대화 노력은 무의미할 지도 모른다.

일반적으로 정치의 최종목표는 강제와 설득을 통해 주민들의 요구를 충족시켜 주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타락된 정치는 오히려 주민들의 우민화를 통해 비판의식을 마비시키고 절대자에게 무조건 맹신하도록 강요하는 한편, 심지어 주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빼앗기까지 한다. 독재자들의 비법·탈법적 행위가 가능한 이유는 피치자의 종교적 속성 즉, ‘의존으로부터의 행복감’ 때문으로서 독재자들은 이러한 취약점에 침투하여 무조건 복종만이 자유라는 괴변을 주입시킨다. 종교화된 정치는 정치자체는 물론 인간성까지 파괴시키는 바, 그 대표적인 사례가 북한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처럼 특수한 체제인 북한연구의 적실성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종교정치적 접근법(religious political approach)이 사용되어야 할 것이다.⁶⁾ 종교화된 정치적 편린들을 찾기 위한 천착은 매우 지난할 것으로 생각되나, 우선 북한이 중심가치체계(central value system)로 여기는 주체사상에 나타난 귀절들을 문헌고찰법(literature approach)에 의해 종교화된 정치적 구절들을 추출하는 것이 유용하리라 본다. 자료는 원 자료 외에 북한연구 관련 2차 문헌과 방문자, 귀순자들의 증언, 특히 지난 정상회담과 남한 언론사 사장단과의 면담시 김정일 발언 등이 사용된다.

6) Robert N. Bellah, *Beyond Belief* (New York: Harper & Row, 1970)

II. 종교정치에 대한 일반적 고찰

1. 종교정치의 구성요소

일반적으로 지배자가 권력을 절대화하는 과정에서 정치의 종교화가 발생한다. 특히 독재자는 정당한 방법에 의한 지배보다는 권력을 신비화함으로써 주민통합을 이루려 한다. 그 결과 권력은 유사종교로 변하고 종교적 요소를 내포하게 된다. 다만 연구 진행상 문제점은 종교정치의 구성요소가 무엇인가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다는 점이다.⁷⁾

뒤르켐(Durkheim)은 인간사회에서 발견되는 다양한 종교를 포괄하는 정의를 작성하고자 하였다. 모든 종교에 공통적이고 보편적인 요소를 추구한 후 그는 모든 종교는 사물을 두 개의 반대집단 즉, 성스러운 것(the sacred)과 세속적인 것(the profane)으로 구분한다고 보았다. 뒤르켐은 신의 개념을 가지지 않은 종교는 있으나 성스러운 것을 인정하지 않는 종교는 없다고 보았다. 그는 “종교는 성스러운 것들 즉, 따로 보관되고 금지된 것들에 대한 믿음과 실행의 통일된 체계이다. 그 믿음과 실행은 그것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교회라고 불리우는 하나의 도덕적 공동체로 규합시킨다”라고 말하였다. 아울러 모든 종교는 서로의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세 가지의 보편적 요소를 포함한다고 뒤르켐은 주장한다. 첫째, 이론적 요소인 믿음체계(belief system), 둘째, 실천적 요소인 의식체계(ritual system), 셋째, 사회적 요소인 사회관계의 체계가 있다는 것이다.⁸⁾

특히 여기에서 사회관계의 체계가 중요한 것은 어떠한 믿음과 관행

7) 이원규, 『종교사회학』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2000), p. 48.

8) Emile Durkheim, *The Elementary Forms of the Religious Life*, trans., by Joseph Swain (New York: The Free Press, 1965), p. 62.

6 북한체제의 정치적 특성과 변화 전망

의 체계가 종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공유해야 함을 의미한다. 어느 개인이 가지는 독단적인 믿음과 실행은 종교가 아니다. 완전한 종교는 사회적 현상이다. 많은 이들이 그것을 공유하고 그들이 상호관계를 맺으며 집합체를 형성해야 한다. 믿음과 실행 체계가 발생하고 유지되는데 사회적 관계의 체계와 집합체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사회관계가 종교의 기본요소로 인정된다.⁹⁾

위와 같은 요소를 참조하여 종교정치적 조작적 정의(operational definition)를 내려보면 종교정치란 “정치가 믿음의 대상으로서 교주와 절대이념을 보유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儀式과 사회관계를 보유하고으로써 종교화된 상태”라 할 수 있을 것이다.

2. 정치의 종교화 배경

정치지도자는 자기 권력을 절대화하려는 욕망을 가진다.¹⁰⁾ 권력의 절대화 목적은 어느 누구도 자신의 권력에 도전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소위 전체주의 내지 나찌즘의 국가체제 및 공산주의의 그것은 이같은 정치의 유사종교화의 산물이었다. 거기에는 인간 실존의 목표 및 기준으로서 ‘민족적인 것’ 또는 ‘계급적인 것’ 이외의 어떠한 기준도 설정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인간을 독재자들이 스스로 유일한 가치라고 설정한 것에만 묶어두려는 독재자들의 의도는 하나의 가치를 신화화함으로써 누구도 그 가치에 도전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의도가 배어 있다. 정치의 종교화, 신화화, 절대화가 그것이다.

결국 정치가 종교화되는 이유는 지배자가 주민이나 관료의 반항을

9) 오경환, 『종교사회학』 (서울: 서광사, 1984), pp. 38.40.

10) 이극찬, 『정치학』 (서울: 법문사, 1986), p. 191.

억제하고 자신의 권력을 영구화하기 위해 자신을 ‘신’이나 ‘신이 선택한 자’로 규정하기 때문이다. 물론 지배자의 논리가 통하는 배경은 열악한 사회정치적 환경과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주민들이 ‘메시아’를 원하기 때문이다.

북한에서 정치가 종교화된 내용을 구체화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김일성은 해방이후 권력확립 과정에서 수많은 도전을 받았기 때문에 향후 권력에 대한 도전 방지를 위해 권력의 절대화 필요성을 강하게 느꼈을 것이다. 김일성 신격화를 위해 ‘수령론’이 등장하게 되었고 수령은 곧 ‘신’이라는 등식이 등장하였다. 김일성은 자신을 신격화하기 위해 많은 사람을 ‘이단’으로 몰아 처형하였다. 둘째, 해방이후 사회경제적 환경은 가난과 불확실한 미래밖에 없었다. 사회주의 개혁을 통해 농민들에게는 토지가 주어지고 남녀는 동등한 입장이 되었지만 정치적으로 혼란을 거듭하고 경제상황은 매우 열악하였다. 아울러 6·25전쟁으로 인해 산업시설의 80%가 파괴되었고 남북한간 불신은 더욱 증폭되었다. 북한주민들은 불안하였고 뭔가 돌파구가 마련되지 않으면 안된다는 생각을 갖기 시작하였다.

셋째, 해방이후 및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북한주민들은 가난과 ‘外侵’으로부터 보호해 줄 강력한 지도자를 원하게 되었다. 남한과는 달리 북한에는 변변한 외국원조도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구원자에 대한 열망은 더욱 컸다. 북한주민들은 자신을 구원해 줄 대상으로 김일성을 꼽았고 김일성은 이것을 역이용하였다. 김일성은 자신이 ‘구원자’임을 자임하였고 ‘수령’을 칭하였다.

Ⅲ. 북한체제의 종교정치적 고찰

1. 북한체제의 종교정치화 과정

북한체제는 다양하게 성격지워 질 수 있을 것이나 김일성 사망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유일신교에서나 가능한 ‘김일성 영생론’¹¹⁾을 주창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종교정치 국가’로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즉 북한의 수령 유일지배 체제는 ‘종교정치적’ 권력구조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김일성 사망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1998년 9월 5일 헌법수정을 통해 북한은 김일성을 ‘영원한 주석’으로 옹립, 교주 김일성의 불멸성 (immortality)을 확립하였다.

일반적으로 종교의 기본요소는 교주, 성경, 찬송가, 성소, 예배 등이 다. 이러한 측면에서 김일성(교주)에 대한 맹신(믿음), 주체사상(성서), 우상화 가요(찬송가), 주간총화(예배), 당원(신자) 등은 북한의 ‘종교국가적’ 요소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세속화가 시작된 이후 북한은 세속화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다양한 권력구조를 도입하여 왔는 바, 1998년 9월 5일 국방위원장 체제를 도입함으로써 ‘救世軍’적 권력구조를 도입하였다.

기본적으로 북한 권력구조는 수령(=교주)유일지배 체제로서 수령은 인민들에게 ‘사회정치적 생명’을 부여한다고 주장될 만큼 신성시되고 있다. 수령은 무오류, 무결점, 무부패의 인간으로서 인민들에게 ‘사회정치적 생명’을 부여해 준 절대자로 선전되고 있다. 따라서 수령의 권

11) 북한은 김일성 사망에도 불구하고 김일성이 아직도 주민들을 보살피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신다”라는 구호를 사용하고 있음.

위는 신성하고 누구도 이에 대항할 수 없는 신적인 존재이고 이의 교리인 주체사상은 절대적인 중심가치체계(central value system)이다.

수령은 신성성 유지를 위해 인민들이 지속적으로 예배하도록 만들고, 성서인 주체사상을 일탈할 경우 가혹한 처벌을 단행한다. 인민들은 물론 특히 관료(=사제)들은 권력 그 자체인 수령에게 절대 복종해야 하고 누구나 수령을 모범으로 삼아 건설하고 청빈하게 생활해야 할 의무를 보유하고 있다.

북한은 '김일성교'의 세속화를 위해 당과 사회단체 등 각종 전위기구를 설립하였다. 세속화의 도구가 되는 각종 기구들은 수령의 요청에 의해 언제든지 변경될 수 있고 여기에는 어떤 典型이 있을 수 없다. 따라서 어떤 비정상적 기구이든 그것은 수령의 권위를 제고하기 위한 목적에서 설립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현재 북한의 최고 세속권력은 국방위원장에게 있다. 국방위원장은 헌법상 '국방사업 전반을 지도'하도록 되어 있고, 이는 북한이 이미 '구세군'적 군조직 체제로 전환되었음을 의미한다. 국방위원회는 1972년 사회주의헌법상 중앙인민위원회의 부문별 위원회로 출발, 1992년 사회주의헌법에서는 독립된 기구로 전환되었다. 이 당시 국방위원회는 '국가주권의 최고군사지도기관'이었고 국방위원장은 '일체무력을 지휘 통솔'하는 권한을 가졌다.

그러나 1998년 9월 채택된 '김일성헌법'상 국방위원회는 '전반적 국방관리기관'으로 되었고 국장위원장은 '국방사업 전반을 지도'하도록 되었다. 따라서 '구세군'의 수장인 국방위원장이 군대화된 북한사회를 '지도'하는 것은 당연하고 이러한 논리적 근거에서 국방위원장인 김정일은 북한의 최고통치권자이다. 북한이 국방위원장체제를 도입한 이유는 김일성교의 세속화에 필요한 국내외 자원을 효율적으로 총동원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사회주의권 붕괴, 김일성 사망, 연이은 자연

재해 등 김일성교 자체의 붕괴위기를 맞은 북한은 체제약화의 신속한 복원을 위해 과도기적으로 ‘전시공산주의’¹²⁾적, 군사적 동원체제를 도입한 것이다.¹³⁾

2. 종교정치로서의 수령제

통치 권위를 조직이나 직이 아닌 자연인의 신성에서 갖게 되면 그 정치 체제는 이미 신정 체제로 된다. 보통사람은 그 누구도 그 신성을 나누어 가질 수 없으므로 지배자의 지위를 승계 할 수 없으며, 오직 그 신성의 권위를 빌어 신성을 대표하는 사람이 위임한 사람만이 통치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이다.

북한이 김일성의 신성을 지배 권위의 원천으로 하는 신정 국가이기 때문에 김정일은 오직 김일성의 권위로 통치할 뿐이다. 비유하자면 그리스도는 자기의 권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로 인간을 영적으로 지배하는 것이지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승계’한 것이 아닌 것과 마찬가지로 ‘유훈통치’가 아직까지 지속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1당 독재를 실시하고 있는 조선노동당은 “오직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주체 사상, 혁명 사상에 의해 지도된다”¹⁴⁾고 못박고 있다. 따라서 누가 당의 새로운 지도자가 되더라도 당의 지도노선을 바꿀 수 없게 되어 있다. 종교에서 신의 교리에 해당되는 것이 김일성의 주체

12) 레닌(Lenin)은 1918.7.1921.3까지 ‘전시공산주의’ 체제를 채택, 전국토를 요새화하고 내부자원의 총동원 특히, 농민들로부터 식량을 최대한 공출하였으나 농민들의 거센반발에 부딪혀 이후 신경경제정책(NEP)을 채택하였다.

13) 스탈린(Stalin)은 1941.6.30 독소전쟁이 시작되자 자신과 외상 몰로토프, 정치국원 보로시로프, 비밀경찰총수 베리아, 정치국후보위원 말렌코프 등 5인으로 국가방위위원회를 구성한 바 있다.

14) 1980년 제6차 당대회시 개정된 조선노동당 규약 전문

사상, 혁명 사상이므로 누가 당의 수령직을 계승하더라도 수령의 직을 넘는 절대적 권위로서의 김일성 ‘말씀’을 따르도록 규정되어 있다. 새로운 당수나 당 간부는 오직 김일성교의 ‘사제직’을 수행할 수 있을 뿐이다.

김일성주의의 정식화는 대체로 1974년 2월 19일 김정일이 “온 사회를 김일성주의화 하기 위한 당사상사업의 당면한 몇 가지 과업에 대하여”¹⁵⁾라는 연설을 한 때쯤에 시작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김정일은 1982년 3월에 김일성주의를 총정리한 “주체 사상에 대하여”라는 논문을 발표하였고 동년 4월 1일자 『로동신문』에서는 이 논문을 “주체 사상을 김일성주의로 정식화하고 그 체계와 내용과 원리 및 방법을 전면적으로 집대성한 논문”¹⁶⁾이라고 평가한 것을 보아도 북한 당국에서는 대체로 1980년대 초를 김일성 신정체제 완성기로 보고 있는 것 같다.

이제 북한은 김일성을 신격화하였고 김일성주의 경전을 갖추었으며 노동당이라고 하는 사제단을 가진 ‘유사’ 종교 단체로 되었다. 북한은 단순한 전체주의 사회가 아니다. 전통적 의미의 사회주의 국가도 아니다. 이제 김일성이라는 유일신을 가진 종교 국가로 되었다. 북한 사회의 이러한 종교 국가적 특성을 이해하지 않으면 오늘의 북한 사회를 이해하기 어렵다. 북한의 정치도 사회도 문화도, 그리고 북한의 대외관계도 북한의 종교 국가적 특색을 전제하지 않고는 쉽게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신정 국가로서의 북한 사회의 특색은 통치권의 포괄성에서 찾을 수

15) 김정일, “온 사회를 김일성주의화하기 위한 당사상사업의 당면한 몇가지 과업에 대하여(1974.2.19),”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3』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7)

16) 『로동신문』, 1982.4.1.

있다. 통치자는 인민의 정치 생활만을 간여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인민의 물질적 생활, 문화 활동 등 모든 영역을 지배한다. 뿐만 아니라 인간의 내면적 정신 세계까지 통제한다. 그런 점에서 북한은 역사상 어느 전체주의보다도 더 철저한 전체주의 전체 사회로 굳어졌다고 할 수 있다. ‘수령님의 뜻에 따라 생각하고 수령님의 뜻에 따라 일하고 수령님의 뜻에 따라 죽는’ 사람들로 구성된 사회가 북한 사회이다.¹⁷⁾

가. 수령제의 종교성¹⁸⁾

북한에서 김일성은 곧 ‘신’이다. 비록 그는 사망했지만 알파요 오메가이며, 한시도 없어서는 안될 공기와 물, 불이다. 김일성을 제외하고 북한을 논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빼고 기독교를 논하는 것과 같다. 물론 김일성은 신 자체는 아니고, 신격화된 인간이다.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보통을 조금 넘는 정치 지도자이다. 그러나 북한이라는 동굴에 사는 사람들은 그를 신으로 모시고 경배한다. 김일성은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전지전능하고 무소불위의 절대자로 추앙 받고 있다. 만약 당장 김일성이 죽으면 북한은 망하고 모두 함께 죽어버릴 것 같아 북한 사람들은 생각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김일성이 없어도 그 靈力을 그대로 전수 받아 이전과 같이 자기들을 지켜줄 수호신으로서 김정일이라는 ‘後繼神’을 만들었던 것이다.

북한주민들은 조선역사 5천년 동안 조선이 가졌던 비극은 위대한

17) 이상우 외, 『북한 40년』 (서울: 을유문화사, 1988), pp. 24.28; 이상우, 『북한정치입문』 (서울: 나남출판, 2000), pp. 70.74.

18) Dae Sook Suh, 『KIM IL SUNG』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88); 와다 하루키, 이종석 역, 『김일성과 만주항일전쟁』 (서울: 창작과비평사, 1992); 임 은, 『김일성평전』 (서울: 옥촌문화사, 1989)

지도자가 한 명도 나타나지 않은 것이고, 이제 5천년간 기다렸던 지도자가 드디어 북한에 나타났는데 그것이 곧 김일성이라고 믿고 있다. 구세주가 탄생한 것이고 기쁨에 넘쳐 그들은 김일성교의 성지인 만경대를 성지순례하고, 순례 자체를 자랑스럽게 여기며, 재외동포와 외국인들을 끌어다 순례시키고, 경배하도록 하였다. 현재도 그들은 김일성을 믿도록 하기 위해 밤낮으로 ‘전도사업’에 열중하고 있다.

만경대는 1912년 4월 15일 김일성이 태어난 초가집으로 평양시 교외의 대동강변 만경대에 자리잡고 있다. 여기에는 미국상선 제너럴 셔먼호를 물리쳤다는 김일성의 증조부 김응우, 일본관헌을 우롱하고 김일성의 부친과 함께 싸웠다는 조부 김보현, 농부로서 일제 치하에서 반일 지하운동을 했다고 하는 김일성의 아버지 김형직, ‘조선의 어머니’로 추앙 받고 있는 김일성의 어머니 강반석 등이 함께 경배를 받고 있다. 사실상 김일성 일가가 나타나기 전에는 험한 악의 세상이었고, 김일성이 태어나면서부터 새로운 세상이 창조되었다는 ‘신판 창세기’가 펼쳐진다.

김일성교의 전도사들은 제2차 세계대전 동안에 외국의 지배 즉, 사탄(Satan)과 사이비 신으로부터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 민족의 성지인 평양에 김일성이 탄생했으며 이것은 한민족이 선택된 민족이기 때문이라고 설교한다. 이제 한국의 수호신들은 김일성에 의해 그들이 수천년간 누려온 지위에서 쫓겨나 버렸다.

김일성이 북한에서 신적 지위를 누릴 수 있게 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인민들이 김일성 이외의 다른 지도자들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상호 비교를 해 볼 수가 없고, 둘째, 김일성이 아니었으면 식민 질곡에서 벗어나지 못했을 것으로 북한 인민들은 믿고 있으며, 셋째, 김일성이 6.25 전쟁을 통해 제국주의 강대국 미국과 ‘聖戰’을 벌여 승리로 이끌었고, 그후 전후 복구를 효율적으로 성취해

낸 것도 전지전능한 김일성에 의한 것이라고 북한 인민들이 믿고 있기 때문이다.

생존시 김일성은 일제와 미국을 교묘히 이단으로 몰아, 싸워서 이겨야 할 사탄으로 인민들에게 각인 시켰고, 사탄과의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자기를 중심으로 튼튼히 뭉쳐야 하며, 어떠한 시험과 난관도 참고 견뎌내야 한다고 설교했다. 이러한 논리를 합리화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經典이 필요하게 되었다. 그것이 바로 주체사상이다.

주체사상은 북한의 종교이자, 국가 철학이고, 국민들의 세계관, 인생관, 삶의 지침이다. 북한 인민들은 주체사상을 주야로 묵시하고, 토론하며, 실천하고, 반성하는 일을 반복한다. 주체사상은 영생불변의 진리로서 어떤 사상이나 철학보다 앞서 있어서, 신앙정도가 떨어지는 북한 이외의 나라의 신앙상태로는 그것을 이해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주체전도사들은 주장한다. 북한만이 이러한 놀라운 사상이 나올 수 있는 주·객관적 조건을 갖추었고, 그 조건을 주체적으로 이용할 수 있었던 김일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철학이 나올 수 있었다는 것이다.

이것은 역사상 대부분의 사이비 종교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경전만이 만고의 진리라고 주장하는 것과 상통한다. 주·객관적 조건은 분단된 남·북한과 미·일·중·러 라는 4대강국에 둘러싸여 항상 강대국의 침략에 시달리게 된 것을 의미하고, 더 이상의 침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강대국과 융화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동시에 자주독립을 유지해야 했기 때문에 김일성이 주체사상을 창시하지 않으면 안되었다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북한에서 무엇보다 중요시되는 것은 주·객관적 조건을 바로 인식하고, 일점일획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대처해 나갔던 김일성 수령의 존재이다. 북한은 한반도에 김일성 수령이 ‘강림’한 것은 우연이 아니며, 필연적으로 나오게 예정되어 있었다는 ‘예정조화설’

을 신봉한다. 위대한 지도자에 의해 창시된 주체사상을 통해 우주는 하나로 통일되고,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사물들은 상호 투쟁·갈등적 관계에서 상보적 관계로 변한다는 것이다. 김일성이 갖는 리더쉽은 초인간적인 것이며, 신이 인간으로 현실했기 때문에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갖춘 ‘半神半人’인 것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북한 정치는 정치종교라 규정해도 무방할 것이다.

클루크혼(Kluckhohn)은 “세계관은 자연, 자연에서의 인간의 위치, 인간 대 인간의 관계에 관한 보편화되고 체계화된 개념과 인간 상호관계와 인간 대 환경의 관계에서 옳은 것과 그렇지 못한 것에 관한 개념의 총체라고 정의 할 수 있다”고 했다. 이 개념은 공산주의와 기독교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두 가지가 다 자연, 인간위치, 인간관계의 본성에 대한 개념을 내포할 뿐만 아니라 조직적인 가치관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특정의 사회제도와 사회구조를 효과적으로 합법화하고, 정당화한다는 점에서 두 체계는 유사성을 보인다.

공산주의와 종교를 포함하는 모든 세계관들은 경험적이고, 실증적으로 입증될 수 없는 명제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초경험적이며 초과학적인 명제와 믿음이 대량으로 내포된 세계관을 사람들은 경험적이고, 과학적인 입증에 의해서가 아니라, 개인적 경험 즉, 신앙적 체험에 의해서 받아들인다. 그래서 하나의 세계관을 받아들이고 인식하는 행위는 신앙 행위이다. 유신론적이거나 무신론적이거나 세계관은 대부분 실증적으로 입증 불가능한 믿음과 명제로 구성되어 있는데, 세계관을 갖지 않은 사람은 없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신앙인이라고 볼 수 있다. 즉 인간은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명제를 받아들이고 인정한다는 의미에서 신앙인이다.

북한 인민들은 주체사상을 과학적 검증이 없이, 신앙에 입각해서 사실로 받아들인다. 주체사상이란 “사람이 모든 것의 주인이며, 모든 것

을 결정한다”는 철학적 원리를 바탕으로 “사람이 세계와 자기운명의 주인이고, 사람이 세계를 재건하고 자기 운명을 개척하는 데 있어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사람은 가장 발달된 물질적 존재로서 오랜 진화과정에서 형성된 육체적·생물학적 기초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생명물질이 가질 수 없는 “자주성·창조성·의식성”을 가진다는 것이다. 즉 “자주성·창조성·의식성”이 없는 사람은 세계의 주인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근로인민대중은 역사의 주체이며 사회발전의 동력”이라는 사회역사원리가 있다. 그러나 근로인민대중이 역사의 주체인데 언제나 자기운명을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개척해 나가는 주체는 아니고, 인민대중이 혁명의 자주적인 주체로 되기 위해서는 “당과 수령의 영도하에 하나의 사상, 하나의 조직으로 결속되어야 한다”고 함으로써 ‘혁명적 수령관’으로 흘러간다.

수령은 이론적인 면, 사상적인 면, 실천적인 면에서 완벽하기 때문에, 그대로 따라만 가면 ‘구원의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이다. 인간은 생물학적 생명만 가지고는 살 수 없고, 그 사회에 적응하여 살기 위해서는 ‘사회정치적 생명’이 필요한데, 이것을 부여해 준 것이 수령이라는 것이다.¹⁹⁾ 결국 수령이 육신의 부모보다 더 귀중하다는 논리이다.

사람의 생명을 두개로 본 것이 특이한 발상이다. 사실 인간세계에는 부모보다 종교 교주를 더 신봉하며, 가족보다는 종교 가족들을 위해 모든 시간과 물질을 바치는 예가 허다하다. 이러한 점에서 수령은 북한을 이끌어 나가는 구심점이고 핵이며, 뇌수이다. 수령의 절대화·신격화를 통해 북한 주민들은 일사분란하게 단결하고 수령의 영도에 따라 행동한다. 수령에 대한 인식의 방법과 태도는 서방세계나 남한의

19) 김정일, “주체사상교양에서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1986년 7월 15일),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의 문헌집』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 pp. 159~164.

그것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남한에서는 수령 김일성 주석은 독재자였다고 비난하지만, 북한 인민들은 수령을 북한체제를 생존시키고 번영시킨 영도자로 본다.

수령은 누가 되든지 북한 사회주의를 이끌어 나가야 하는 뇌수이기 때문에 모든 전권을 위임하고 절대적으로 떠맡겨야 한다는 것이다. 수령없는 집단주의는 불가능하고 수령이라는 절대자 없이는 모든 사람이 함께 살아야 하는 집단 공동체를 끌고 나갈 수 없다는 것이다. 수령은 일반적 독재자처럼 인민대중 밖에 있어서 지배와 복종의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인민 안에 있는 공동운명체라는 것이다.

북한 사람들은 수령과 인민은 한 몸이기 때문에 수령을 예찬하는 것은 인민을 예찬하는 것이라고 믿는다. 사실 수령은 종교국가의 교주나 일본의 천황과 비슷하다. 수령 즉, ‘神人’인 김일성에 대한 칭송을 보면 다음과 같다. “김일성동지는 비범한 예지와 심오한 통찰력을 지니고 정력적인 사색과 불면불휴의 탐구로 시대와 혁명의 앞길을 밝히고 노동계급의 혁명사상을 새로운 높은 단계로 발전완성시킨 위대한 사상이론가이며 인민에 대한 끝없는 사랑과 고매한 공산주의적 덕성을 최고의 높이에서 지니고 근로인민대중에게 가장 고귀한 정치적 생명을 안겨주며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마련해 주는 인민의 자애로운 아버지이다”²⁰⁾라고 북한은 김일성을 칭송하고 있다.

김일성은 인간이 갖는 종교적 측면을 교묘히 이용 통치의 효율성을 극대화 시키는 탁월한 능력의 소유자였다. 정치가 인간이 원하는 모든 욕망을 해결해 줄 수는 없다. 욕망을 자제하도록 유도하여 갈등의 소지를 원천적으로 봉쇄함으로써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일종의 정치이다. 현재의 욕망을 미래로 넘기게 하는 데는 종교의 역할이 크

20) 사회과학출판사 편, 『주체사상총서 9: 령도체계』 (서울: 지평, 1989), p. 16.

다. 모든 인민은 미래(공산사회)를 위해 현재의 고난은 참고 견뎌야 한다는 교리를 믿는 것이 모든 것의 해결책이다. 모든 문제는 ‘살아있는 신(Live God)’ 김일성만 믿고 따르면 해결된다는 논리이다.

정치체제의 유지는 국민 대다수의 정당성 인정이 선행되었을 때 가능하다. 그것이 정치적 수단이 되었건 종교적 수단이 되었건, 국민의 불만이 극소화된 상태는 불만이 없는 사회가 된다. 정치권력자들은 특정 정치체제를 종교적으로 합법화시키기 위해 현존하는 제도를 초월적 질서와 연관시켜 질서의 파괴자를 혼돈과 악마의 세력과 결탁한 자로 몰아세워 공개적으로 책벌한다. 물론 북한에서의 악마는 미국이다.²¹⁾

종교적으로 합법화된 제도에 대한 위법자는 악마의 세계에 가담하는 것이고, 그것은 반사회적, 반민족적, 반민중적인 행위로서 치절한 처벌의 대상이 된다. 이러한 이탈자들은 잔인한 방법으로 처단된다. 여기에서 폭력이 정당화된다. 결국 종교적 합법화로 인해 제도나 논리는 극히 성스럽게 되고, 위반행위는 악과의 결탁이 되므로 제도위반행위는 어려워지고 체제의 안정성은 공고히 된다. 이 경우 정치종교적 지도자는 책임이 없어지고, 오히려 미화·정당화된다.

정치체제를 인간의 종교성에 호소해 합리화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집단행동과 집단적 의식(ritual)이 사용된다. 이곳에의 참여 거부는 배교자로 치부되고, 질타의 대상이 되므로 반강제적으로 참여하게 되고, 참여과정에서 약화된 신앙이 오히려 강화되기도 한다. 김일성은 이러한 인간의 속성을 교묘히 이용, 집단체조, 집단행군 등 집단주의를 강조, 정치적 통합을 이루어 왔다. 특히 ‘수령 후계자’ 김정일은 상징조

21) 비록 현재는 미국과의 관계개선에 나서고는 있지만 북한이 기본적으로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혁명(NLPDR)’ 노선을 포기하지 않는 한 북한의 ‘주적’은 미국임.

작으로 소위 거석문화인 거대한 건조물들을 축조, 주민들의 자발적 내지는 반자발적인 복종을 유도해 왔다.

나. 김정일과 종교정치²²⁾

종교집단은 대체로 영력의 계속성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종교체제를 유지할 수제자들을 기르게 마련이다. 종교의 생명력은 얼마나 많은 수제자를 길러 세계각지에 파송하느냐에 따라 좌우된다. 사이비종교일수록 비이성적인 절차와 방법으로 영력을 유지하려 한다. 종교화된 정치체제에서는 후계체제에 대해서 과도할 정도로 많은 시간과 비용을 지불하여 확고한 체제구축에 심혈을 기울인다. 김일성은 소련에서 스탈린 사후 격하운동이나, 중국 모택동에 대한 임표의 배신 등에서 교훈을 얻어, 본인 사후의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고, 자기 영력의 전수자로서 가장 확실한 육체적 분신인 아들 김정일을 간택했다.

북한에서는 김정일이 아들이기 때문이 아니라, 다음 세대의 수령으로서의 모든 자질을 갖추었고 인민들로부터 전적인 추앙을 받고 있기 때문에 후계자가 되었다고 설명한다.²³⁾ 단지 아들이라는 이유로 수령이 되어서는 안되지만 아들이라고 해서 수령이 못되서도 안된다는 논리로 후계체제를 정당화시키고 있다. 김정일은 뛰어난 지도력과 추진력으로 이미 70년대부터 사회주의 건설에 있어서 중추적 역할을 했으

22) 줄저, 『김정일 리더십 연구』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4); 정창현, 『결에서 본 김정일』 (서울: 토지, 1999); 서대숙, 『현대 북한의 지도자』 (서울: 을유문화사, 2000); 조영환, 『매우 특별한 인물 김정일』 (서울: 지식공작사, 1996); 박규식, 『김정일 평전』 (서울: 양문각, 1992); 진성계, 『김정일』 (서울: 동화연구소, 1990)

23) 조선로동당출판사, 『인민의지도자 1』 제2판 (동경: 시대사, 1983), pp. 1~7.

며, 김일성의 품성과 사상과 덕목을 가장 많이 닮았으며, 김일성을 가까이 모시면서 수령의 역할을 배우고 체득했기 때문에 수령의 후계자가 되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이다.

북한은 평등한 사회주의 사회이므로 능력이 있으면 누구나 자기사상을 글로 발표할 수 있고 지도력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후계자를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 없으며 현재까지는 김정일을 다방면에서 따라갈 수 있는 정도의 전지전능한 사람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굳게 믿고 있다.

고도로 종교화된 정치체제에서는 신내림을 매우 극비리에 추진하는 것이 상례이다. 공개되는 것 자체가 부정타는 것이며, 천기를 누설하는 것이 되어 큰 재앙이 오는 것으로 믿고 있다. 물론 그것은 수많은 반발세력들이 일어나 카리스마에 도전해 오는 재앙을 말한다. 이러한 비밀공천을 합법화시키기 위해 김일성이 직접 신내림을 한 것이 아니라 ‘장로들’ 즉, 원로 정치국원들을 동원했다. 아무리 민주화된 종교집단이라도 교주가 의도하지 않는 정책결정을 건의할 사제는 없다. 그것은 신권에 도전하는 것이며, 신에 대한 모독이며, 천벌을 받을 일이기 때문이다. 사실상 후계구도는 김일성의 ‘神託’이었다.

당시 ‘장로’ 김영주 등 몇 사람을 동원, 김정일의 간택을 주장케 했고, 김일성은 일부러 몇 번 거절했고, 이에 장로들은 순서에 따라 신자(인민)들을 대거 동원 김정일 추대를 간청하게 했으며, 결국 김일성은 마지못해 받아들이는 척 했다. 이것이 곧 정치의 종교적 측면이다. 이후로 김일성은 동원된 밑으로부터의 요구의 수용이라는 권모술수를 시의 적절하게 잘 이용했다. 그는 인간에게 내재되어 있는 종교적 속성을 너무나도 교묘히 이용할 수 있는 천재였음이 틀림없다.

이러한 수법이 여타의 사이비 종교와 달리 국가 전체를 하나의 두리에 뭉쳐 놓을 수 있는, 김일성 만이 할 수 있는 신비로운 방법일 지

도 모른다. 일단 장로와 신자들에 의해 자발적으로 요청해 결정하는 형식을 빌었을 때는 교주는 책임이 없으며, 잘못된 것은 신자들의 신앙 부족으로 돌려진다.

제 2의 교주로 성장한 김정일은 누구인가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자. 김정일은 1942년 2월 16일 소련 하바로브스크(북한에서는 백두산 밀영으로 주장)에서 김일성과 김정숙 사이의 2남 1녀중 장남으로 태어났다. 1949년 9월 22일 어머니 김정숙과 사별하여 어렸을 때부터 고독하게 자라났다. 1952년 만경대 혁명학원 인민반 4학년에 편입했다가 1953년에 평양 제 4인민학교 5학년에 편입하였고, 이후 1960년 남한의 서울대 입학보다 더 어렵다는 김일성 대학을 입학, 명실공히 최고의 elite사제 코스를 밟기 시작했다.

1964년 「사회주의 건설에서의 郡의 위치와 역할」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써서 김일성 종합대학 경제학부를 졸업했다. 1964년 조선 노동당 조직지도부 지도원 및 김일성 수행원을 시작으로 공직에 몸을 담기 시작했다. 김정일은 중학 때부터 다방면의 지식과 정치적 식견, 이론을 소유하고 넓은 정치적 안목을 가질 수 있도록 계획적으로 교육, 육성된 후, 공직에 들어가서도 철저히 계획적인 공인으로 만들어졌다.

1966년초 당중앙기관내 주요조직들을 장악케 했는데, 당시 노동당 내부의 실권을 장악했던 사람은 김일성의 친동생인 김영주이었다. 조직지도부 중앙지도과 중앙기관 담당 책임지도원으로 있으면서 일반인들 앞에는 잘 나타나지 않았고, 김일성 일족을 호위하는 호위국 업무에 많은 시간을 보냈다. 그러다가, 드디어 김정일은 자기의 특기를 살리고, 아버지로부터 신임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잡게 된다. 김일성은 사상교양사업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 영화예술 부문에서 반당적 요소를 제거하고 영화를 단시일내에 혁명사업의 주요 수단으로 발전시키기를 바랐고, 이것을 눈치 채 김정일이 이 일을 직접 해

보겠다고 떠맡고 나섰다.

김정일은 영화예술을 지도관장하는 선전선동부 문화예술 지도과장이라는 직책을 달고 당 사상사업의 핵심 부문인 문화예술 부문을 장악, 당 사상사업 전반을 관장하는 실권자로 등장했다. 결국 노동당 사업의 기본핵심 부서인 조직지도부는 김영주가, 선전선동부는 사실상 김정일이 틀어쥐게 됐다. 김정일은 영화예술부문을 맡고 나서 67년 9월 한달 동안 중앙과 지방의 영화예술 문화 부문에 종사하는 배우, 작가, 연출가, 성악가, 연주가 등 예술인들을 모아놓고 과거 자기가 어떻게 했는가, 무엇이 잘못인가 하고 한마디씩의 신앙간증(자아비판)을 시켰지만 그 죄과에 대해 한사람도 처벌하지 않았다.

일부의 사람들은 김정일 만세까지 부르면서 김정일이 개인적 처벌을 내리지 않은 것에 대해 고마워했다. 회개하고 돌아오면 용서해 준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이다. 김정일은 영화제작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속도전’을 내세웠고, 작품내용은 반드시 당과 김일성을 찬양하는 것으로 되어야 하고, 최대의 질을 유지하면서 최단시일내에 제작토록 했다. 작품내용 또한 주체사상의 내용을 인민들에게 전도할 수 있는 내용으로 만들었고, 특히 김일성의 항일 빨치산 운동을 신화화하는 내용을 주로 강조했는데, 김일성이 빨치산 활동시절 제반 악 조건에서도 살아남은 것을 교훈 삼아, “생산도 학습도 생활도 항일유격대식으로”라는 구호를 만들어 사용했다.

김정일은 그 동안의 제작태도에서 완전히 벗어나 거듭나도록 독려했고, 직접 ‘이신작칙(以身作則)’을 하면서 예술인들을 끌고 나갔다. 최신식 영화촬영 설비를 들여왔고, 배우와 작가들을 소련 등지에 보내 실습을 시켜 실력을 배양토록 했다. 그와 함께 예술인들에 대한 처우도 대폭 개선해 주어 예술에만 전념토록 생활보장을 해주었다. 예술인 전용상점을 따로 내주고 전용버스를 제공한다 든가 특별 선물로 시계,

전축, TV, 이불 등을 공급해 주었다. 인민배우, 공훈배우의 칭호를 주어 우대해 주고, 노동당원증을 김정일이 직접 수여하는 등 사기진작에 힘을 기울였다.

최은희·신상옥 부부가 평양에 거주하는 동안 받은 환대는 꼭 회유하기 위한 목적 뿐 아니라 실제로 예술인들에 대한 예우가 극진했다는 증거로 볼 수 있다. 김정일의 이러한 정책은 최고 권력가가 어느 부분에 관심을 갖느냐에 따라 발전의 정도가 급격히 달라진다는 예가 된다. 이 시기에 「한 자위대원의 운명」, 「피바다」, 「꽃 파는 처녀」, 「밀림아 이야기하라」, 「당의 참된 딸」 등의 영화를 만들어 내고, 이것을 가극으로 만들어 대중성을 확보함에 따라 김일성의 이상화에 절대적 기여를 했으며, 김일성의 마음을 흐뭇하게 해 주었다.

종교에서의 음악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장엄한 음악과 마음을 안정, 차분하게 해주는 조명등은 우민화 정책의 표상이다. 김정일은 예술에 대한 천재적 재능과 탁월한 지도력의 소유자로 알려지게 되었고, 69년에 선전선동부 부부장이 되었다. 70년부터 당 선전선동부와 조직지도부 사업중대 부분을 사실상 김정일이 장악을 하고, 김일성을 비롯한 가계의 인물들에 대한 신화창조에 진력을 다했다. 한편 1969년 중앙여맹위원장에 취임한 김일성의 처 김성애는 여맹이 노동당의 외곽단체에 불과함에도 김일성의 처라는 이유로 당 사업, 국가 사업에 관여하기 시작했다. 많은 불만과 비판이 있었으나 1971년 “김성애는 자신과 같은 사람이므로 무조건 따르라”는 김일성의 지시가 있어 모두다 충성을 다했다.

김성애는 지위가 확보되자 김정일의 생모 김정숙에 대한 격하운동을 벌여, 이에 종사했던 많은 사람들을 파문시켰다. 김성애의 전횡에 대해 누구도 김일성에게 직언을 하지 못하고 있었으나, 김성애의 월권이 극에 달하자 옛날에 김정숙을 따르던 전문섭, 백학립, 조명록 등이

김정일에게 정보를 제공했고 김정일은 정확한 정보수집을 지시했다. 김정일은 어릴 때부터 갖고 있던 김성애에 대한 반감이 되살아나 결정적 증거만 있으면 김성애가 영원히 정치에 간여하지 못하도록 할 시나리오를 모색하였다. 반면 김성애는 김정일이 김일성의 후계자로 부각되는 것을 두려워해서, 김일성을 설득하여 김평일을 후계자로 삼으려는 책략을 꾸미고 있었다. 정통(Orthodox)이나, 이단(Heterodox)이라는 싸움이 시작되었다.

1970년 11월 노동당 제5차 당 대회를 전후해 김일성의 동생 김영주가 병석에 눕게되고, 사실상 후계자의 위치에서 사라지자 김성애와 김정일 간의 암투는 더욱 거세어 졌다. 평소 김영주·김일·최용건 등은 김정일을 후계자로 책봉하자고 간청했으나, 김일성이 이를 번번이 묵살했다. 이미 그는 후계구도에 대한 구상을 가지고 있었으나 시기가 더 무르익기를 기다렸다. 그때까지는 김일성은 김성애를 의심하지 않았다.

후계구도가 최초로 공식적으로 거론된 때는 1971년 4월 말 당중앙위 제5기 2차 전원회의가 끝나고 전원회의 사업을 결산하는 정치국 상무위원회에서였다. 이때 김영주가 최초의 발언자로 나서서 자기의 입장을 밝히고, 현재 영화예술 부문을 위시한 당 선전선동사업에서 크게 성공하고 있는 것은 김정일의 공로라고 찬양하면서 조직담당 비서 자리에 등용할 것을 제의했고, 김일·최용건이 이에 동조했다.

그러나 김일성은 김정일이 나이가 너무 어려 대내외적으로 당의 위신이 추락할 수도 있다는 이유를 들어 본심과는 달리 보류하고 있다가, 1971년 6월 『사로청』 제6차 대회 연설을 통해 “혁명의 과녁은 변하지 않았는데, 세대는 바뀌어 해방 후 세대들이 나라의 주인으로 등장하고 있으므로 이들에게 혁명의 대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김일성은 모든 일들을 암시적이고 신비스럽게 처리

해 나갔는데 이것은 그의 종교적 속성이 뛰어남을 보여주는 것이다.

같은 해 <근로자> 7월호가 “모든 청년들을 우리 혁명의 참된 후계자로 튼튼히 키우자”는 글을 통해 “아버지가 다하지 못한 혁명위업은 아들이 함으로써 대를 이어 가면서 실현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여 김일성의 대권 승계자는 해방후 세대인 김정일이라는 것을 암시했다.

이후 1973년 2월말 정치국 상무위원회는 상반기 전원회의에서 김정일을 조직담당 비서의 자리에 앉히기로 결정했다. 또한 8월 30일 정치국 확대회의를 열어 이 문제를 논의했고, 9월 4일부터 당중앙위 제5기 7차 전원회의를 잇달아 열어, 3대혁명 수행문제와 3대혁명소조 활동문제를 토의했다. 이 회의에서 김정일을 당 중앙위 조직부장 겸 조직담당 비서, 선전부장과 사상담당 비서 자리에 앉히기로 정식 결정했다. 결국 당중앙위 제5기 7차 전원회의에서는 김일의 제의로 김정일을 조직 비서겸 사상 비서로 임명키로 결정하고 그 결정내용을 전체 하급당 단체들과 당원들에게 하달했다. 당권의 핵심인 조직지도부와 선전선동부를 한 사람에게 맡긴 것은 노동당 역사에서 그 유례가 없는 것이었고, 그것은 일찌감치 김정일을 완전한 후계자로 굳혀놓기 위한 수단이었다.

노동당 내부적으로는 김정일을 ‘영명한 친애하는 지도자’로 부르게 되었고, 대외적으로는 ‘친애하는 당 중앙’이나 ‘당 중앙’으로 호칭했다. 1974년 2월 16일 김정일의 생일이 전당 및 전지역적인 축하의 날로 정해졌고, 1976년부터는 공휴일로 정해졌으며, 이날부터 4월 15일 김일성 생일 때까지를 충성맹세 기간으로 설정했다. 김정일은 政敵인 김성애를 약화시키기 위해 전문섭에게 지시를 내려 평양시당과 중앙여맹에 검열원들을 보내 73년 말부터 약 5개월간 정밀조사를 시켰고, 그 결과를 김일성에게 보고했다. 김일성은 이 보고서를 접하고 노발대발하여 시당전원회의와 여맹 중앙위원회를 열어 비판토록 하고, 관련

자 전원을 파계시키고, 김성애는 자모산 별장에 연금시켰다. 김일성은 김성애의 애절한 회개를 받아들여 6개월 후 복권시켰으나, 공식석상에는 나오지 못하도록 했다.

김정일은 어머니 김정숙을 신화화하다가 좌천됐던 사람들을 복권시키고, 김정숙에 대한 우상화에 더욱 박차를 가했다. 그는 또한 저항세력의 색출을 위해 1973년 11월에 국가보위부를 신설해 직접 관장하여 권력기반을 확고히 다져 나갔다. 1977년 2월 이후 북한 언론에서 ‘당중앙’이란 말의 사용이 중단되고, 1976년 8월부터 약 2년 반 동안 공식석상에 모습을 나타내지 않아 많은 억측을 낳기도 했으나, 1979년부터 ‘당중앙’이라는 칭호가 다시 등장했고, 평양 방송은 김정일을 가리켜 “주체의 태양 김일성의 혁명위업을 받들어 나가는 영광스러운 ‘당중앙’”으로 칭했으며, 김일성·김정일 부자의 사진이 공식적으로 나란히 붙어있는 것이 북한을 방문한 외국기자들의 눈에 목격되었다. 루이제 린저도 이것을 잘 증언해 주고 있다.

군부내의 저항세력은 날이 갈수록 그 세력이 약화되었고 1979년 9월 김정일의 왼팔이라 할 수 있는 오극렬이 군총참모장으로 기용된 후 부터는 김정일의 군에 대한 영향력은 더욱 확대 강화되었다. 김정일은 1980년 10월에 개최된 제6차 당대회에서 비로소 공개적으로 권력진면에 부상했다. 더 이상 비밀주의를 고수할 필요가 없어진 것이다. 당중앙위원회 정위원 1백 45명 중 김일성, 김일, 오진우에 이어 4위의 정치국 위원과 상무위원에 임명되었고, 김일성에 이어 제2순위로 당비서에 선출되었고, 당 군사 위원회에서 김일성·오진우의 뒤를 이어 서열 3위를 차지했다.

김정일이 공식 후계자가 된 이후 첫 정치활동은 1981년 5월 묘향산 지구 건설현장을 방문한 것이었는데, 공식행사에 자주 등장한 편은 아니었다는 점에서 확고부동한 후계체제 구축에 많은 난관이 있었던 것

으로 믿어진다. 반면 자신의 특기인 예술분야 발전과 선전선동 강화에 더욱 주력했는데, “사상도 기술도 문화도 주체의 요구대로”, “생산도 학습도 생활도 항일 유격대 식으로”, “우리식대로 살아가자” 등의 구호를 만들어 인민들로부터 행동의 열정을 끌어냈고, 이것은 그가 ‘구호정치’의 전문가임을 보여주는 증거들이다.

그의 중심역할은 사실 1973년 2월 13일부터 시작된 3대혁명소조 운동이었다. 이것은 세대군인이며 열성당원인 대학졸업반 학생들과 김일성 고급당학교 학생, 기술자, 사무원 등을 주축으로 조직되어 각 공장·기업소와 협동농장, 각 기관과 학교들에 파견되어 국가경제기관과 당조직 기능을 높이며 간부들의 사업작풍을 바로잡고, 근로대중들의 열성을 끌어내는 운동이었다. 이 운동을 통하여 김정일의 지도적 권위를 높임으로써 간부의 세대교체 뿐만 아니라, 막연히만 생각했던 김정일의 위치를 확인시켜 후계자 문제를 해결했는데, 김정일은 이 운동을 계기로 북한전역을 순회하면서 중·하급 간부들의 인기를 얻어 지지기반을 굳혔다.

경제적으로는 자력갱생을 위해 주민들의 노동력을 효율적으로 동원하여 생산성 향상을 가져왔고, 「천리마 운동」의 대체운동으로서 「3대혁명 붉은기 쟁취 운동」을 벌여 통합된 힘을 발휘해 나갔다. 이것은 또한 많은 문제점을 노정했지만, 3대혁명소조 운동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후에 이 운동에 참여했던 많은 당 관료들이 김정일의 지지기반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김정일에게는 대단히 의미 있고 추억 어린 운동이다.

어떻든 김정일은 1981년 후반부터 점차 공개행사에 나타나기 시작했고, 10월에 열린 사로청 제7차 대회와 11월의 직업총동맹 6차대회에서는 김일성과 나란히 주석단에 앉아 북한의 제2의 교주임을 나타내 보였다. 1982년 2월에 실시된 제7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에서 3

대혁명소조 출신 1백 82명(전체 27.8%)이 기용되어 정권기관 부문에 까지 권력기반을 확대하여 당·정·군의 모든 부문을 관장하기에 이르렀다.

1986년 5월 김일성은 『김일성 고급당학교』 40주년 기념행사에서 당 비서 허담이 대독한 ‘강의록’을 통해 “우리 당에서 혁명 계승문제가 만족스럽게 해결되었다”고 밝혀 김정일의 권력승계가 이미 확고해졌음을 분명히 했고, 1991년 6월 1일 일본 교도통신 사카이 신지 사장과 의 인터뷰에서도 “김정일이 노동당을 전면적으로 지도하고 있고, 당 뿐만 아니라 경제사업 등 모든 분야에서 사업을 지도하고 있다”고 말함으로써 사실상 김정일이 권력을 행사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1990년 5월에 개최된 최고인민회의 제9기 1차 회의에서는 김일성의 유일적 영도체계와 함께 김정일의 후계체제를 보다 확고히 하는 조치가 취해졌는데, 김정일은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으로 추대됨으로서 노동당뿐만 아니라 국가 권력기관과 군부에 있어서도 그가 김일성 다음의 교주라는 것이 확인되었다. 김일성 사망 후 3년여 동안 최고지위를 전수 받지 않았다. 그 이유는 전임 교주에 대한 예우 때문이었다. 전임자에 대한 예우를 최대한 보임으로써 자신이 효성과 충성의 화신이며 인민들도 김일성에게 바쳤던 동급수준의 충성을 자신에게도 보여줄 것을 간접적으로 시사하는 것이었다. 이와 함께 김정일은 ‘유훈통치’를 정치노선으로 채택하고 김일성의 유훈 관철에 혼신을 다하였다. 지난 6월의 남북정상회담 수락도 ‘유훈통치’의 일환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다. ‘김일성교’의 사제들²⁴⁾

종교정치적 체제는 열성적인 신도들에 의해 확대·심화·발전된다. 열성적인 신도들은 보통 신자들과는 달리 교리를 철저히 신봉하고, 정확한 해석능력과 이해력이 뛰어나, 모범적인 행동으로 실천을 한다. 이 역할자를 사제가 하는데, 사제는 실천을 통해 교주를 보좌하여 신자들을 일정한 방향으로 효율적으로 이끌어, 목표를 달성시킨다.

사회주의에서는 이러한 사제적 역할자를 당원이라 칭하여 그 역할을 매우 중요시했고, 당원이 되는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여기도록 훈련하고 세뇌했다. 북한에서 당원이 되기 위해서는 “당의 유일사상체계가 확고히 서 있어야 하고, 당성을 부단히 단련하기 위한 높은 조직의식을 가지고 당 생활에 자발적으로 참가하여 자신을 혁명화, 로동계급화 하여야 하며, 혁명적 군중 로선을 관철하며, 일상적으로 대중과 함께 일하여야 하고, 고상한 공산주의적 도덕성을 소유하고 조직과 집단을 사랑하며 조직과 집단의 이익을 위하여 개인의 이익을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한다”²⁵⁾고 되어 있다. 당원들은 교리를 충실히 받들고, 수행하는 역할을 할뿐이지, 교리에 이의를 제기하고 수정할 권한은 없다. 로동당 규약 전문에도 “조선 로동당은 오직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주체사상, 혁명사상에 의해 지도된다”고 못박고 있다.

북한은 이제 제2의 교주에 의해 통치되고 있다. 그는 김일성의 아들인 김정일이다. 김정일은 교주와 김일성의 사제단들이 이룩해 놓은 탄탄한 기반을 그대로 물려받아, 아버지의 권위와 그 동안 스스로 쌓은 권위를 합쳐 더욱 절대적인 신성성을 보유하게 되었다. 이에 덧붙여

24) 줄지, 『김정일정권의 권력엘리트 연구』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5)

25) 자세한 내용은 조선노동당 규약 제1장 ‘당원의 임무’ 부문 참조.

혁명적 균중노선을 직접 실천하여, 신자들의 애환을 공유하고 있는 어찌면 아버지보다 더 공고한 통치집단을 소유하게 되었다. 이들은 모두 교리와 신앙을 양수겸장한 존재들로서 이단적 요소가 거의 없는 정통파(orthodox)들로만 구성되어 있다. 이들은 대체로 김정일과 비슷한 '주체신학교'를 나왔는데, 만경대 혁명학원, 김일성 대학 등이 그것들이다. 사제단들의 사회경제적 특성을 보다 자세히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김일성·김정일의 친·인척들이다. 수령 유일지배체제인 북한에서 수령의 '神聖家族'들이 권력상층부에 대거 등용되어 있다는 것은 매우 자연스런 현상일지 모른다. 체제적 특성으로 인해 김일성 사망에도 불구하고 김정일에 의해 친인·척들이 주요 부서에 등용되고 있다. 이것은 김일성 생존시에도 사회경제적 환경, 특히 출신성분을 중요시했던 정책의 연장선상에서 취해진 조치인 것으로 분석된다. 생존시 김일성은 연고주의 등용사례에 대해 신랄한 비판을 가했으나 이와는 반대로 그 자신의 친·인척에 대해서는 예외로 하였다. 수령 후계자인 김정일도 이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친·인척 등용 이유는 김정일 자신에 대한 충성심과 출신성분의 우수성 때문이지만 '육친적 배려'를 좋아하는 김정일의 통치 행태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것은 향후 권력구조의 경직성, 공조직의 무용화, 비친·인척들의 반발 등을 야기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인 친인척은 박성철, 김영주, 양형섭, 김용순, 김창주, 김경희, 이용무, 강현수, 장성우, 장성택 등이다.

둘째, 빨치산 세대 및 빨치산 2세이다. 유격대국가인 북한에서 빨치산들이 득세하리라는 것은 쉽게 예상할 수 있는 문제이다. 빨치산은 국가수립, 한국전쟁, 전후복구, 김일성유일지배체제 확립, 후계체제 수립과정에서 항상 결정적 역할을 하였다. 이들은 김정일의 '혁명적 의리'를 중시하는 정책에 따라 북한체제에서 최고의 사회경제적 배경 소

유자가 되고 아울러 최상위의 대우를 받고 있다. 오진우 사망 전 김일성의 상중임에도 불구하고 프랑스에서 치료받도록 했던 김정일의 특별배려가 ‘혁명선배’인 빨치산에 대한 김정일의 각별한 관심을 증명해 준다. 김정일은 명절 때 뿐만 아니라 평시에도 이들을 국가원로로 대우하고 있다. 북한이 적십자 회담을 통해 60여명에 이르는 비전향장기수를 기를 쓰고 데려갈려는 이유도 여기에서 찾아진다. 물론 이들은 자연수명이 다함으로써 김일성, 오진우, 최 광, 김광진, 이종욱처럼 자연사하는 빨치산이 증가되고 있으나 이들은 자연사하기 직전까지 최상의 대우를 받고 있고 사후에는 혁명열사능에 안치되는 영광을 누린다. 대표적인 인물들은 박성철, 김철만, 김익현, 백학림, 이용무, 황순희, 이을설, 조명록, 최성숙 등이다.

아울러 북한 권력엘리트의 구성상 특징 중 하나는 빨치산의 직계후손인 2세들의 등용이 많다는 점이다. 그 이유는 직계후손들은 당과 수령에 대한 충성심, 국가에 대한 자긍심, 외국에 대한 투쟁심이 높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기 때문이고 ‘사회주의대가정론’에 입각, 국가유공자에 대한 ‘육친적 배려’가 관행화 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김정일 체제가 존속하는 한 당성과 충성심이 높은 빨치산 2세들의 권력엘리트 진입율은 점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표적인 빨치산 2세는 한성룡, 김국태, 오극렬, 임수만 등이다.

셋째, 현역군장성이다. 북한군은 자유민주주의와는 달리 현실정치에 깊숙이 개입한다. 군고위 장성들은 당정치국, 국방위원회, 최고인민회의, 내각 등에 진출, 각종 지위를 점유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에서는 군 고위장성에 오르는 것이 유력한 권력엘리트 진출 방법이 되고 있다. 김정일은 김일성과 달리 빨치산 경험이 없는 혁명 2세대이기 때문에 1974년 후계자 내정 이후부터 군권장악에 매진하였다. 김정일은 당서열상승, 승진인사 등 각종 시혜를 통해 군의 충성을 유도하였다. 김

정일은 1992년 4월부터 2000년 현재까지 약 1000여명의 장성을 승진 시킴으로써 자신의 군내 권력기반을 든든히 하였다. 사실 북한군은 ‘인민의 군대’라기 보다는 ‘수령의 군대’로서 김일성·김정일의 私兵에 가깝다. 이것은 당규약 제46조에도 “조선인민군은 조선로동당의 혁명적 무장력”임을 명백히 밝히고 있는 데, 이것은 북한군이 국가가 아닌 노동당 즉, 김일성·김정일의 군대라는 것을 의미한다. 경제난이 심화되면서 사회동요가 심해지자 김정일은 ‘선군정치’를 내세우고 군의 역할을 증대시켰다. 1995년 1월 1일부터 군부대를 방문하여 군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자신에 대한 충성을 강조하였다. 북한군은 국방뿐만 아니라 경제건설과 사회치안까지 맡음으로써 그 권한이 막강해 졌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김정일의 안위와 권력안정을 위한 역할일 뿐 북한군의 김정일에 대한 충성에는 변함이 없다. 지난 정상회담시 조명록총정치국장이 사복을 입고, 정상회담 합의를 지지한 것이 상징적 사건이다. 대표적인 김정일지지 군부엘리트는 이을설, 조명록, 김영춘, 김철만, 백학립, 김일철, 이하일, 김익현, 전재선, 박기서, 이종산, 현철해, 박재경, 원응희 등이다.

넷째, 만경대혁명학원, 김일성종합대학, 해외유학 출신자들이다. 우선 만경대혁명학원 출신들은 가장 대표적인 권력엘리트들이다. 만경대혁명학원생들은 입학 때부터 충성심과 출신성분이 좋은 자들만 입학이 허가되었기 때문에 졸업 후 상위 권력엘리트로 올라가는 데 유리한 위치를 점유하였다. 김일성은 1948년부터 혁명유자녀들이 항일운동을 했던 부모들의 유업을 이어 받아 반제투쟁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만경대혁명가유자녀학원, 해주·남포혁명가유자녀학원을 설립하였다. 김일성은 만경대출신은 군부엘리트로, 해주·남포출신은 정치엘리트로 육성시키려 하였다. 만경대혁명학원으로 개명된 이 학교는 김정일을 비롯한 수많은 혁명2세들이 졸업하였고 김정일정권의 제1

지지기반이 되고 있다. 이 학원은 군대식 교육과 11년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대표적인 만경대혁명학원출신자들은 전병호, 한성룡, 서윤석, 최태복, 연형묵, 김국태, 오극렬, 조명록, 김일철 등이다.

한편 김일성은 민족간부 양성을 위해 1946년 김일성종합대학을 설립하였다. 이 대학 입학자격은 우수한 성적은 물론 사상성과 사회경제적 배경이 뛰어난 자들만으로 제한되고 있다. 따라서 ‘金大’출신자들은 자긍심이 높고 특히 학교 명칭에서도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김일성에 대한 충성심이 매우 높다. 물론 김일성대학 출신자들 모두가 무조건 충성하는 자는 아닐 것이지만 현재까지는 김정일 지지세력 대부분이 김일성대학출신자들이다. 오늘날 김일성종합대학은 권력엘리트로 진입하기 위한 필수코스라 정착되었다. 대외개방이 더욱 가속화될 것을 고려한다면 김정일은 충성심과 능력을 겸비한 김일성대학 출신을 더욱 많이 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표적인 김일성대학 출신자들은 김영남, 전병호, 한성룡, 서윤석, 최태복, 최영림, 홍성남, 양형섭, 연형묵, 김기남, 김국태, 김용순, 김창주, 이창선, 오극렬, 김경희, 장성택 등이다.

한편 해외유학파들에 대한 김일성의 공개적 비판에도 불구하고 해외유학파들이 상위 권력엘리트 그룹을 형성하고 있다는 것은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물론 생존시 김일성은 고졸직후 유학가는 대신 김일성대학 출신자들 중 혁명성이 높은 자들을 선발, 유학시키도록 함으로써 유학을 방해하지는 않았으나 ‘주체공화국’ 북한이 해외유학파를 선호하는 것은 역설이라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김정일이 제한적이나마 개방노선을 선택함으로써 향후 자본주의국가와의 교류가 빈번해질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해외유학출신자들의 등용기회는 더욱 증대되리라 예상된다. 물론 상위 권력엘리트들의 유학지가 구소련·동구로 한정되었고 유학시기도 스탈린주의가 팽배하였던 1940~50년대에 편중

됨에 따라 당분간은 사회주의체제에 대한 전면적 포기나 수정은 어려울 것으로 예견된다. 대표적인 해외유학파는 박성철, 김영주, 김영남, 계응태, 전병호, 최태복, 최영립, 홍성남, 양형섭, 연형묵, 김기남, 김국태, 김중린, 김용순, 오극렬, 이을설, 조명록, 김일철 등이다.

현재 북한의 권력구조나 권력엘리트는 모두 김정일에 의해 조직되고 등용되었다. 김정일은 1974년 노동당내에서 후계자 책봉된 이후 자신의 구도에 맞게 조직과 인물을 정비해 왔다. 따라서 김정일의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은 누구도 최고위직에 올라가지 못하였다. 김일성 사망후에도 사망으로 인한 공석을 보임하는 것 외에 인물변동이 크게 일어나지 않은 이유도 김정일이 이미 오랫동안 사상검증을 통해 등용된 자들이 고위직을 점유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현재 북한의 최고 권력기관은 김정일이 위원장으로 있는 국방위원회다. 국방위원회 위원들은 김정일 위원장을 비롯해 조명록 제1부위원장, 김일철·이용무 부위원장, 김영춘·연형묵·이을설·백학립·전병호·김철만 등 10명이다. 김정일은 지난 6월 15일 정상회담 기간중 국방위원회를 소집, “휴전선을 포함해 어디에서든 절대로 남한을 비방하지 말 것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위원회는 북한의 최고권력기구이다. 아울러 김용순이 몸담고 있는 당비서국, 김영남이 위원장으로 있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등에 포진하고 있는 권력엘리트들이 김정일 권력의 토대가 되고 있다. 물론 최고위직은 아니지만 ‘party cabinet(연회 관료)’에 자주 참석하는 자들도 간과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김정일을 떠받들고 있는 분야별 권력엘리트들은 다음과 같다.(〈표 1〉 참조)

<표 1> 분야별 주요 권력엘리트

분 야	인 물
당	계응태, 김국태, 김기남, 김중린, 김익현, 한성룡, 김용순, 김경희, 장성택, 문성술, 엄기순, 이용철, 송호경, 안경호
국방위 원회	조명록, 김일철, 이용무, 김영춘, 연형묵, 이을섭, 백학림, 전병호, 김철만
군	박기서, 이하일, 이종산, 김용연, 현철해, 박재경, 원응희
최고인 민회의	김영남, 양형섭, 김용대, 김윤혁, 유미영, 최태복, 장철, 여원구
내각	홍성남, 조창덕, 곽범기, 백남순, 박남기, 강석주

* 중복자는 한곳만 선택

마지막으로 우리의 관심은 자연스럽게 북한 권력엘리트들의 성향은 어떨까 하는 데로 모아진다. 사실 지난 6월 정상회담에서도 보았듯이 김정일만큼 전향적인 사고를 가진 권력엘리트도 드물 것 같다. 김정일은 김용순이나 안병수, 송호경 등 대남담당 전문가들의 건의를 뛰어넘어 ‘북한의 등소평’ 같은 정책결정을 하였다. 즉 김정일은 6·25행사 중지, 휴전선 및 각종 매체에서의 대남 비방방송 중지, 『범민족대회』 남북한 개별 개최 등 그 동안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결정을 하였다. 반면에 권력엘리트들은 아직도 보수적인 사고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역사적으로 김일성·김정일은 정치노선의 차이가 발생하였을 경우 철저한 탄압을 가하였기 때문이다.

김일성은 생존시 ‘사대주의’와 ‘종파주의’를 제일 싫어하였다. 그 이유는 정적들이 외세를 등에 업고 파벌을 만들어 자신에게 도전하였기

때문이다. 1956년 ‘8월중과사건’이 대표적인 사례였다. 이 사건으로 김일성 정적들은 대부분 소멸하였다. 이후 북한에는 노선대립이나 파벌 투쟁이 종식되었고 권력엘리트들은 한목소리를 내는데 익숙해졌다. 설사 상이한 의견을 내면적으로 보유하고 있다 할지라도 체제적 특성으로 인해 공식매체는 물론 일상행동에서조차도 자신의 성향을 전혀 나타내지 못한다. 다만 김용순을 비롯한 ‘개방지형적’ 인물들이 김정일의 ‘교시’에 따라 열심히 제한적 대외개방을 수행해 가고 있을 뿐이다.

이제 경제난 심화는 북한의 대외개방을 더욱 촉진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다. 김정일은 ‘모기장식’ 개방을 통해 사회주의체제는 유지하면서 경제발전을 이룩하려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그러나 설령 ‘북한식 개방’을 실시한다 하더라도 개방을 담당할 최소한의 권력엘리트는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향후 북한은 개방정책 가속화에 필요한 인력확충을 위해 충성심을 기본전제로 개방적 인물의 등용을 확대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천하의 김정일’도 ‘권력의 세속화’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주체사회주의를 옹위하기 위해서는 친·인척, 빨치산 2세, 군관료, 보수적 김일성대 출신자 등만 우대하는 귀속주의적 권력엘리트 충원구조나 충성심 우선의 충원원칙만을 고수할 수는 없을 것이다.

IV. 북한체제의 종교정치화 실태

1. 이념·정치 분야

김일성과 김정일은 ‘신’과 ‘신의 후계자’로 되고 절대복종의 대상으로서 ‘혁명적 수령관’이 확립되었다. 특히 ‘사회정치적생명체’론은 수령을 ‘신’으로 만드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였다. 주체사상과 이에서 도출된 ‘당의 유일사상체계확립의 10대원칙’은 ‘성서화’되었다. 그리고 김일성의 사망에도 불구하고 그는 영생한다는 ‘영생론’의 등장은 김일성이 종교지도자로 변모했음을 확인해 주는 역할을 하였다. 물론 이외에도 ‘사회주의대가정’론, ‘육친적 배려,’ ‘아버이,’ 충성과 효성, 의리 등 ‘유교적’ 특징, ‘단군시조론,’ ‘김일성 민족,’ ‘수령복’ 등 ‘민족종교’적 측면, ‘총폭탄 정신,’ ‘21세기의 태양’ 등 일본 천황제에서 나온 군국주의적 요소 등 김일성의 절대성을 강조한 종교적 요소들은 무수히 많다.

이와 함께 김정일은 김일성과 동일시됨으로써 ‘2위일체론’이 되고 있다. 이것 또한 북한이 ‘종교정치국가’임을 증명해준다. 이러한 행태는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 후에도 지속되고 있다. 즉 ‘혁명적 수령관’에 대한 강조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정상회담 이후인 6월 19일자 『로동신문』은 김정일 총비서의 당중앙위원회 사업시작 36돌(6.19) 기념사설에서 “사회주의 강성대국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김정일동지의 령도를 충성으로 받들어 나가는 것”²⁶⁾이라면서 전당·전군·전민이 김 총비서의 영도에 더욱 충실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정상회담이나 언론사 사장단과의 대담에서 보듯이 김정일은 무소불위의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아도 될 것 같다. 김정

26) 『로동신문』, 2000.6.19.

일은 시종일관 전향적인 정책을 쏟아냈고 이것은 권력장악이 확실 시되지 않고서는 보일 수 없는 행동이었다. 대남비방 중지, 6·25행사 중지, 당규약 개정 약속, 경의선 복원, 이산가족면회소 설치, 6·25에 대한 성격규정, ‘내부용’ 주한미군 철수론²⁷⁾ 등 실로 ‘혁명적인’ 조치들은 김정일이 절대권력자이며 ‘제왕적’ 위치에 있음을 반증해 준다. 특히 그가 통일시기에 대한 질문에 대해 “그건 내가 맘먹을 탓입니다”²⁸⁾라고 대답하여 남한이나 주변국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자신의 결정에 의해 통일문제가 좌우될 수 있음을 나타냈다. 그의 이러한 발언은 1997년부터 시작된 ‘고난의 행군’을 통해 최악의 상황은 면했다는 자긍심의 발로인 것으로 보인다.

2. 군사분야

수령체제를 보위하는 무장력은 군부이다. 북한군은 ‘수령의 군대’로서 김일성과 김정일에게 충성을 다하고 있다. 조명록 총정치국장은 수령제의 정당성 확보를 위해 김정일의 명령에 따라 미국을 방문하고 박재경 총정치국 부국장은 송이버섯 전달을 위해 남한을 방문하였다. 김정일은 “내 힘은 군력에서 나옵니다. 내 힘의 원천으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가 모두가 일심단결하는 일이고 두 번째가 군력입니다. 외국과 잘되도 군력이 있어야 하고 외국과의 관계에서 힘도 군력에서 나오고 내 힘도 군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와 친해도 군력을 가져가야 합니다”²⁹⁾라고 말함으로써 김정일이 군부와 군사력을 얼마나 중시하는가를 알 수 있다. 북한이 오늘날 ‘선군정치’를 강조하고

27) 『월간 조선』 (2000년 8월호), pp. 62~66.

28) 『동아일보』, 2000.8.14.

29) 『중앙일보』, 2000.8.14. ‘방북언론사장단-김위원장대화록’

있는 사실이 그 증거이다.

북한은 수령제라는 신정체제 옹위를 위해 각종 대량살상 무기를 보유하고 있다. 강력한 군사력만이 수령제를 유지하는 근간이라는 논리이다. 김정일은 미사일 문제와 관련하여 “로켓연구해서 몇 억달러씩 나오는데 그거 안할 수 있습니까? … 수리아(시리아)와 이란에 로켓을 판매하고 있습니다”³⁰⁾라고 설명하였다. 그에 의하면 북한은 시리아와 이란에 로켓을 수출하여 연간 몇 억 달러씩 수입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김정일은 군사용 로켓이 아님을 강조하고 있지만 군사력 강화를 위해 향후에도 로켓개발을 지속할 것임을 암시하고 있다.

북한이 로켓개발을 지속하는 이유가 경제적 이득과 과학기술 발전을 동시에 이룰 수 있기 때문이라는 김정일의 설명 외에도 수령체제의 가장 큰 위협세력 즉, Satan인 미국과의 협상 지렛대 확보에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북한이 로켓발사를 중지할 이유는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비록 김정일이 “위성을 대신 쏘주면 로켓개발을 안하겠다”라고 ‘웃는 얘기’로 푸틴 대통령에게 제의했다고 설명했지만 그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향후 수령제 유지를 위한 미사일 개발은 지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3. 경제분야

수령의 교시가 경제과학 논리보다 앞서는 북한에서 경제난이 심화되는 것은 당연한 일인지 모른다. 외부세계를 악마화하여 철저히 폐쇄적 경제체제를 유지한 북한은 주체경제론에 입각, 자력갱생을 경제정책의 모토로 삼았다. 그러나 그 결과는 수백만명의 아사자를 남기는

30) 『한겨레신문』, 2000.8.14.

것으로 나타났다. ‘주체신도들’은 이교도와와의 전쟁이 아니라 자신의 교주의 오도로 인해 무가치한 죽음을 맞이한 것이다. 중앙배급체계가 무너지고 노동자와 산간지역 주민들은 식량구입을 위해 탈북하든지 아니면 떠돌아다니는 신세가 되어 있다. 북한의 공식경제는 거의 마비상태에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분석이다.³¹⁾ 공장가동률이 20%이하대로 떨어져 있고, 중앙통제경제는 작동을 멈추고 있다. 다만 돌격대에 의한 고속도 건설, 토지정리사업, 중·소형발전소 건설, 1호 협동농장에서의 농사 등이 이루어지고 있을 뿐이다.

물론 북한경제는 최악의 상황은 면했다는 주장도 있다.³²⁾ 그러나 이것이 1990년 이전 상태로의 경제회복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특히 식량난에 관한 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요원한 상태이다. 금년에도 130만톤의 식량부족이 예상된다. 식량난 해결을 위해 감자농사를 강조하고 있지만 주민들은 오히려 이를 거부하고 있는 실정이다.³³⁾ 중앙배급체계가 붕괴됨으로써 주민들은 식량구입을 위해 북중국경을 통해 탈출하고 농촌으로의 이동을 시작하였다. 식량부족과 관련 김정일은 “이산가족들이 고향방문까지하고 가족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쌀이 모자란다고 국제사회에 호소하고 있는 주제에 그대로 보여줘야지 숨길 것 없어요”³⁴⁾라고 말함으로써 식량난을 시인하였다.

일반주민들의 경제활동은 식량생산을 위한 터밭, 땀기밭 경작에 나서고 있는 정도이다. 그러나 땀기밭에 대해서는 50%정도의 세금을 징수하기 때문에 차라리 경작하지 않겠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

31) 북한경제가 최악의 상황은 면했다는 주장도 있다. 통일부 정보분석국, 『북한동향』 주간 제471호 (2000.1.22~1.28), pp. 41~42.

32) 통일부 정보분석국, 『북한동향』 주간 제471호 (2000.1.22~1.28), pp. 41~42.

33)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 『조중접경지역 현장조사 보고서』(2000년 7월 9일~16일), p. 11.

34) 『국민일보』, 2000.8.14.

다.³⁵⁾ 주민들은 식량난 해결을 위해 개인 상행위를 하고 있다. 가재도구나 골동품 매매에 그치고 있지만 주민들은 화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고, 집을 매매하는 행위까지 등장하고 있다. 상당한 자본축적자도 등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³⁶⁾ 북한은 이를 헌법에 반영, 제24조에 개인경리의 사유화를 인정하였다.³⁷⁾ 이러한 모습이 자본의 본원적 축적을 의미하는 것은 물론 아니다. 그러나 주민들이 중앙정부의 배급이 아닌 개인활동을 통해 먹거리를 해결한다는 것은 정치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즉 이러한 현상이 장기화될 경우 김정일이나 노동당에 대한 주민의 신뢰가 저하됨으로써 주민의 집단행동 등장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결국 이와 같은 밑바닥의 경제상황과 민심은 김정일을 경제문제에 주력하도록 압박하였다. ‘교주’로서의 위신제고를 위해 김정일은 ‘천년왕국’의 꿈을 제시하였다. 북한은 1998년 8월 22일 ‘강성대국론’을 내세웠다. ‘강성대국론’은 사상강국·정치대국·군사강국·경제강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북한은 ‘경제강국’ 건설이 미진함을 인정하고 향후 ‘경제강국’ 달성에 매진할 것임을 분명히 하였다.³⁸⁾ 북한이 이러한 발전 방향을 제시한 이유는 1996~’97년간의 ‘고난의 행군’과 1998년의 ‘사회주의 강행군’을 통해 체제붕괴위기에서 벗어나 ‘잘살아보세’식의 발전 방향을 정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북한은 현재 ‘경제강국’ 건설을 위해 실리주의적인 정책을 도입하고 있다. 금년 「공동사설」은 “모든 부문에서 실리를 철저히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

35)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 「조중접경지역 현장조사 보고서」, 앞의 책, p. 24.

36) 집을 수채씩 소유한 자도 있다.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 「조중접경지역 현장조사 보고서」, 위의 책, p. 18.

37) ‘김일성 헌법’ 제24조 참조.

38) 이에 대한 자세한 분석은 줄저, 「북한의 ‘강성대국’ 건설 실태 평가」 (서울 통일연구원, 1999) 참조.

하고 연합기업소 제도를 전면적으로 재조정하고 있다. 1998년 헌법개정을 통해 개인경리를 인정하는 한편, 분조관리제의 분조규모를 7~8명 정도로 축소하고 있다.³⁹⁾

한편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자본주의 국가들로부터의 지원은 필수적이라는 인식이 분명한 어감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것도 이 시기인 것으로 생각된다. 북한은 1995년 하반기 대홍수 이후 4억 달러가 넘는 외부원조를 받았고 이것이 경제난 회복에 도움이 된 것이 사실이다. 김정일은 지난 6월 30일 문명자씨와의 인터뷰를 통해 대북지원을 해준 한국, 미국, 일본 등에 감사한다고 하였다.⁴⁰⁾ 김정일도 국제적 지원 없이는 생존이 불가능하다는 인식을 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김정일이 남한의 '새마을운동'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유신체제의 불가피론을 피력한 것은 외부지원을 통한 '북한식 개발독재'⁴¹⁾를 실시하려는 것이 아닌가하는 추측을 낳게 한다.

4. 사회분야

김일성 개인에 대한 신격화는 주민들의 이성을 마비시켰다. 절대자에 대한 절대적 복종만이 미덕이 되었고 유사시에는 수령을 위해 일본의 '가미가제'처럼 '총폭탄'이 되겠다는 믿음을 과시하고 있다. 수령

39) 최원기·정창현, 『남북정상회담 600일』 (서울: 김영사, 2000), pp. 251~253.

40) 『말』 2000년 8월호, p. 61.

41) 김정일은 유신정권 수립의 불가피성을 인정하고 '무정부적 민주화'는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힘으로써 개방과 함께 정치적 통제를 강화할 것임을 시사하였다. 『중앙일보』, 2000.8.14. '방북언론사장단-김위원장대화록' 다만 우리가 유념해야 할 것은 김정일이 '개발독재'를 통해 자본주의 세계체제에 편입하겠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오직 '정치적 독재'를 하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즉 '북한식 개발독재'는 '정치적 수령주의, 경제적 실리주의'로 개념화 될 수 있을 것이다.

의 지시대로만 움직이면 ‘천년왕국’에 갈 수 있으리라는 희망을 안고 북한주민들은 열심히 봉사하며 묵묵히 살아 왔다. 그러나 ‘유일사상체계 확립 10대원칙’을 밤낮으로 묵시하며 산 결과는 가난이었다. 중앙배급체계가 붕괴됨에 따라 개인들은 스스로 식량을 찾아 헤매야 한다. 그러나 그들은 누구에게도 불평하지 않는다. 만일 불평하면 천벌을 받는다고 그들은 생각하기 때문이다. 오히려 북한주민들은 ‘유일신’인 김일성의 사망에 눈물을 흘리고 ‘고난의 행군’을 성실히 수행해내고 있다.

북한주민들은 가난의 원인이 ‘악마’인 미국의 대북 제재 때문으로 생각한다. 따라서 미국의 대북제재만 해제되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다. 나아가 통일만 되면 수령제에 대한 위협이나 가난이 모두 사라질 것으로 북한주민들은 기대한다. 그들이 통일을 학수고대하고 남북 정상회담을 열렬히 환영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물론 북한주민들이 생각하는 통일은 연방제통일이다. 그것이 곧 수령의 교시이기 때문이다.

북한주민들은 일종의 예배의식인 총화를 통해 ‘고해성사’를 하고 각종 종교조직인 소년단,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직맹, 녀맹, 농근맹, 교도대 등에 편입되어 주체사상 수행에 매진하고 있다. 물론 때로는 배교자(탈북자)도 발생하지만 그것이 곧 수령제를 붕괴시킬 만큼 심각하지는 않다.

당연한 일이지만 배교자에 대한 처벌은 가혹하다. 그들은 공개처형당하거나 정치범수용소에 감금된다. 북한은 식량구입을 위한 이동과 거래는 허용하되 밀거래, 부정축재, 강도 등 사회악에 대해서는 공개처형을 비롯한 각종 형벌로 다스리고 있다. 물론 ‘김일성교 사제들’은 사상교양도 병행한다. 그들은 교리공부를 통해 수령제의 우월성을 주입시킨다. 지난해 6월 1일 『로동신문』, 『근로자』 공동논설은 “사회생활

의 모든 분야에서 모기장을 튼튼히 쳐야 한다”며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사상교양사업에 힘을 넣어야 한다”라고 강조하였다.⁴²⁾ ‘모기장’론은 이미 김일성 생존시인 1989년부터 등장하였다. ‘모기장’론은 신선한 공기(경제적 과실)는 받아들이되 모기(자유주의 사상, 자본주의의 부정적 요소)는 걸러내겠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사상교양과 강권통치가 주민들의 집단적 행동을 막아주고 있다. 따라서 당분간 반체제 내지는 반정부 운동이 일어나기는 어려울 것이다.

42) 『로동신문』, 1999.6.1.

V. 북한체제 변화 전망

일반적으로 종교는 ‘聖化’단계가 지나면 ‘世俗化’단계를 거치는 데 북한도 예외는 아니어서 1970년 제5차 당대회 이후 지속적으로 세속화되어 왔다. 세속화는 교리의 대중화 과정으로서 이 과정에서 많은 기구와 관료조직이 발생하는 바, 효율적 세속화를 위해 북한은 1972년 사회주의 헌법을 통해 주석제를 도입한 후 1998년 9월 5일 헌법수정을 통해 주석제를 폐지하고 국방위원장체제를 도입하였다.

한편 종교화된 국가에서의 기구개편은 일상화된 일로서 종교체제를 강화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기 때문에 향후에도 북한내에서는 ‘김일성교’의 신성성과 세속성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권력기구 개편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수령 신성성의 세속화 도구인 권력구조는 그것이 수령의 권위만 해치지 않는다면 어떤 형태의 권력구조가 되든 별문제가 되지 않는다. 북한 정치체제는 수상제로부터 주석제로, 정무원으로부터 내각으로, 주석제로부터 국방위원장제로의 변경 등 자유자재로 변경되어 왔다. 아울러 2000년대 들어 북한은 수령제를 세계적 차원에서 인정받기 위해 ‘세속화’ 즉, 대외관계 개선에 매진하고 있다.

1. 변화의 수준

북한체제 변화 수준은 전략과 전술 차원, 체제 및 정권과 정책 차원 등으로 구분될 수 있을 것이다.

가. 전략·전술 수준

북한의 전통적인 대남전략은 ‘대남 적화전략’이었으나 1960년대부터는 평화공존논리인 연방제로 변경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1980년 『고려민주연방공화국창립방안』이 제창된 이후로는 대남혁명을 통한 ‘체제확산’ 전략이 평화공존을 통한 ‘체제유지’ 전략 즉, ‘연방제통일전략’으로 전환된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남북정상회담을 비롯한 각종회담과 이를 통한 남북화해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연방제통일전략’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⁴³⁾ 즉 북한은 어떤 경우에도 ‘수령제 사회주의’는 고수하려 하고 있다. 다만 우리가 유념할 것은 ‘대남 적화전략’은 이미 변경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는 점이다. 물론 북한이 적화전략 즉, ‘전한반도의 사회주의화’를 완전히 포기했느냐는 데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바, 경제난의 완전 극복을 통해 체제적 차원에서 대남 우위를 점유했을 때에는 적화전략이 재등장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이 경우 관건은 북한이 대남 적화전략을 회복할 만큼 남한의 국력을 능가할 수 있을 것이냐는 문제와 남한이 대화를 통해 북한의 대남 적화전략을 무용지물로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는 문제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현재 북한의 전향적인 대남 및 대외정책은 ‘전술과 정책’의 측면이라고 판단되는 바, 북한의 전술은 김대중 정부의 대북 포용정책을 활용한 ‘최상층 통일전선전술’인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정상회담을 포함해 각종 대남 포용정책을 구사하는 이유는 김대중 정부의 대북 포용정책을 1997년 김정일의 ‘8·4로작’⁴⁴⁾을 통해 남한에게 ‘연

43) 이에 대해서는 지난 8월 15일 북한 평양체육관에서 개최된 ‘6·15 남북공동선언’ 지지 정부 정당 단체 연합회의’에서 결의된 4개항 중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 두 개의 제도, 두 개의 정부에 기초한 연방제 통일국가를 건설할 것’을 결의한 제2항이 증거이다. 『중앙방송』, 2000.8.15.

북화해정책'을 촉구한 것에 대한 화답으로 인식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전술에 입각, 북한은 정상회담, 장관급 회담, 국방장관 회담, 경제실무차관회담, 적십자회담, 대남비방 중지, 관광단교류, 개성 지역 개방 등 각종 대남 포용정책을 구사하고 있다. 결국 최근 북한의 대남 포용정책은 연방제전략을 관철하기 위한 통일전선전술의 일환으로서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라는 상이한 체제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공존할 수 있다는 증거를 만들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상이한 체제간 공존의 증거로 중국과 홍콩과의 관계를 제시⁴⁵⁾하고 있다.

나. 체제·정권·정책 수준

정상회담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지속적으로 사회주의와 주체사상을 강조하는 한편, 주체사상의 정수인 '혁명적 수령관'의 중요성을 강조함으로써 북한은 남북관계 및 대외관계 개선을 통해 '수령제 사회주의'를 안정화시키려는 것으로 분석된다. 북한의 변화가 체제수준의 그것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당내 민주주의, 개인농 도입 등이 등장되어야 가능할 것이다.

북한 변화는 새로운 지도자나 정당이 아닌 '수령후계자' 김정일과 조선노동당에 의해 주도되고 있기 때문에 '수구적' 내지는 정권유지적 변화라고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변화의 목적은 통일문제의 주도권 확보, 대외관계 개선을 통한 경제난 해결 등을 매개로 김정일

44) 김정일은 1997년 8월 4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조국통일 유훈을 철저히 관철하자'를 통해 "반북대결정책을 연북화해정책으로 바꾸고 위험한 전쟁정책을 포기해야 한다"라고 주장하였는 바, 김대중 정부의 대북 포용정책을 '연북화해정책'으로 평가하고 정사회담을 수락했을 수도 있음.

45) 북한 『국제방송』은 홍콩의 중국귀속을 앞두고 '한나라 두 개 제도'의 공존 가능성을 언급하고 『고려민주연방공화국창립방안』의 당위성을 역설하였음. 『연합뉴스』, 1997.12.25.

정권을 강화시키려는데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즉 김정일정권의 교체가 아닌 김정일정권의 장기화에 변화의 목적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최근 일어나고 있는 북한 변화의 본질은 정책차원의 변화로서 자력갱생 경제정책, 사회주의권 및 미국 일변도 외교정책으로부터 대외협력 경제정책, 남한 및 여타 자본주의 국가들과의 외교관계 개선 정책으로의 전환이다. 다만 정책변화의 장기화는 전술이나 전략의 변화까지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북한의 정책변화는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2. 변화의 주체

가. 리더쉽

현재 북한변화의 주체는 '제2의 교주'이자 '수령후계자'로서 절대권을 보유하고 있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다. 앞에서 고찰된 바와 같이 북한체제는 수령 유일지배 체제로서 수령은 '神權'에 가까운 절대권을 보유하고 있고 김정일은 수령 후계자로서 수령에 버금가는 권한을 보유하면서 독자적 판단에 의해 당·정·군 관료와 인민들을 지도하고 있다. 김정일의 정책선택은 6·25행사 중지, 개성지역 개방, 경의선 복원, 국방장관회담 등 기존의 사고로는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전향적 조치들이지만 문제는 변화가 무소불위의 지위를 보유한 김정일 개인에 의해 주도되고 있기 때문에 정책 선택의 방향이 언제든 바뀔 수 있다는 점이다.

다만 김정일의 정책선택도 당·정·군 관료들을 통한 주민들의 의견반

영이라는 점에서 김정일도 정책방향을 쉽게 변화시킬 수 없으리라는 전망도 가능하다.

나. 당·정·군 관료

북한의 당·정·군 엘리트는 김정일 정책의 충실한 '전도사'일뿐 현재까지는 변화의 주체가 되지 못하고 있다. 북한의 권력엘리트들은 김정일이 직접 '비준'한 인물들로서 김정일에게 절대충성하고 있다. 다만 당·정·군 엘리트들은 인민들의 여론을 수렴, 김정일에게 정보와 정책을 건의하는 보조역할을 담당한다는 점에서 개방으로 인해 체제훼손이 심각하다고 판단될 경우 김정일에게 개방속도 조절을 건의할 수는 있을 것이다. 특히 북한군 관료들은 매우 보수적인 성향을 지닌 자들로서 김정일의 개방정책 방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이다.

다. 인민

북한인민들은 변화의 객체일 뿐 자신들의 의사를 조직적이고 집단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주체가 되지 못한다. 그러나 경제난의 직접적 피해자는 인민들이고 이들의 불만이 각종 경로를 통해 김정일에게 전달되었을 것이기 때문에 향후에도 인민들은 김정일의 정책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개방이 진행됨에 따라 인민들의 반응은 크게 2가지일 것으로 보이는 바, 그것은 개방으로 인한 민주의식 제고 및 집단행동 가능성과 김정일에 대한 충성 확대 및 체제에 대한 자신감 등이다. 만일 개방을 통해 인민들의 대김정일 충성심이 강화된다면 개방은 더욱 확대되겠지만 '주체종교'에 훼손이 가는 결과가 나타나면 김정일의 개방정책은 취소될 가능성이 있다.

3. 변화의 방향

정치적 개혁은 거부하면서도 경제적 개방을 지속하고 있는 북한은 현재 나진·선봉지역, 금강산 지역, 개성지역 등에 대한 개방에 국한하고 있는 바, 그 이유는 전면적이고 급격한 개방에 따른 인민들의 사상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당분간 북한은 인민들의 사상적 동요가 없다는 자신감이 있을 때까지는 제한적 개방만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남북정상회담 수락, 대남 비방 중지, 개성지역 개방 등 대외분야에 국한된 것이기는 하지만 북한변화의 속도는 급진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김정일의 정책 스타일은 ‘통이 큰’ 정책 결정을 하고, ‘속도전’ 식으로 목표를 향해 모든 역량을 일시에 집중투입하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은 대외관계 개선 속도와는 달리 내내문제에 대해서는 매우 완만하고 점진적인 변화를 채택하고 있다. 북한내부 변화는 경제부문에 있어서 ‘개인경리’를 인정⁴⁶⁾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

4. 변화 전망

‘주체종교’를 희생시키기 위한 전술에서 발로된 것이기는 하지만 김정일의 변화는 등소평이나 고르바초프의 그것처럼 ‘위로부터의 변화’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기본적으로 사회주의체제는 고수하지만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적 요소를 과감히 수용하는 형태이다. 현재로서는 김정일의 변화 범위와 방향을 정확히 예측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신권’을 보유한 김정일에게는 어떤 제한도 통할 수 없기 때문이다. 물

46) ‘김일성 헌법’ 제24조 참조.

론 이에 대한 의구심도 없지 않다. 김정일의 행보는 노선 및 전략의 변화 또는 '추세'가 아니라 전술의 변화나 '일회성 사건'에 불과하다는 주장이 그것이다.

그러나 김정일은 이미 '세속화'를 위해 "루비콘강을 건넜다"⁴⁷⁾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비록 단기적으로는 과거로 역행하는 행동을 취할지 모르지만 이미 전진한 행적은 지워질 수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언젠가는 전진했던 길로 재전진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북한의 변화는 이미 김일성이 1955년 '좌수우수론'⁴⁸⁾에 의해 그 물꼬를 터냈고, 이후 1970년대초, 1984년, 1991년 등 몇 차례의 개방시도가 있었다. 다만 현재의 변화는 그 속도와 범위가 이전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빠르고 넓을 뿐이다. 그리고 북한의 대남혁명 전략은 1980년 「고려연방공화국창립방안」이 제시되면서 남북 양체제의 현상유지전략인 '연방제통일전략'⁴⁹⁾으로 변경되었다. 다만 1946년에 채택된 당강령과 1980년에 신설된 당규약 전문에 '온사회의 주체사상화'가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대남혁명 전략이 유효한 것으로 보이지만 김정일의 언급대로 '대남일군'의 존재이유를 주는 정도의 역할밖에 못하는 화석화된 문장일 뿐이다.⁵⁰⁾ 단지 우리를 부담스럽게 하는 것은 대남혁명 전략은

47) 「신동아」(2000년 8월호), p. 76.

48) 김일성은 허가이·박일우간의 노선논쟁을 비판하면서 "밥을 먹는데 바른손으로 먹든 왼손으로 먹든 또는 숟가락으로 먹든 젓가락으로 먹든 상관할 바가 아닙니다. 어떻게 먹든지 간에 입에 들어가는 마찬가지로 아닙니까"라고 말하여 실용주의적 태도를 취하였다. 김일성, "사상사업에서 교조주의와 형식주의를 퇴치하고 주체를 확립할데 대하여," 조선로동당출판사, 「김일성저작집 9」(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0), p. 477.

49) 이 전략의 실체는 지난 8.15.18까지 실시된 이산가족 상봉시 실체를 드러냈다. 현재제를 그대로 두고 상호 자유왕래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 북한의 배우인 이태성씨는 "통일이 되면 북쪽의 겨울풍경이 필요하면 백두산에서 촬영하고 남쪽의 여름풍경이 필요하면 제주도에서 촬영할 수있다"라고 말하여 북한의 통일관인 연방제의 실체를 분명히 하였다.

50) 「중앙일보」, 2000.8.14. '방북언론사장단-김위원장대화록' 다만 김정일이 노동당 강령에 대한 개정의사를 분명히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개정의사가 없는

아닐지라도 ‘연방제통일전략’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는 점일 뿐이다.

여기에서는 북한의 변화와 관련 단기적·장기적 전망을 하려 한다. 단기적으로는 북한체제가 김정일 주도하에 안정적으로 발전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김정일 노선에 대한 찬반 양론이 등장할 가능성이 있고 이에 대해 김정일이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변화의 양상은 크게 2가지로 나타날 것이다. 즉 2가지 시나리오는 등소평처럼 성공하는 경우와 고르바초프처럼 실패하는 경우일 것이다.

가. 단기적 전망

분야별 단기적 전망은 다음과 같다. 첫째, 주체사상에 대한 강조는 여전히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혁명적 수령관’에 대한 강조 또한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주체사상의 내용은 김정일의 위대성을 부각시키는 내용이 많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통일문제와 관련하여 이산가족 문제를 포함한 각종 전향적 조치를 김정일의 치적으로 내세우고 전향적 조치에 대해 남북한 주민 및 주변국의 지지가 확산될 경우 연합제와 낮은 단계의 연방제를 통합하는 기구를 설립, ‘초대 수장’ 즉, ‘연방대통령’이 되려할 가능성도 있다. 한편 자본주의의 폐해는 지속적으로 강조될 것이고 유일지배 체제는 더욱 강화될 것이다.

둘째, 개방정책은 당분간 지속될 것이다. 김정일의 절대권력에 기반한 전향적인 대남 및 대외정책은 김정일의 권위 제고를 위해서라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금강산 관광 경험 즉, 주민들의 사상이완없이 외화를 획득할 수 있다는 자신감에서 개성, 백두산 개방과 함께 신의주, 남포, 칠보산 등에 대한 개방이 이루어 질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것으로 보인다.

김일성의 경우처럼 난관타개를 위한 해외순방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셋째, 국방위원장 체제는 지속될 것이다.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 안보상 위협요인이 제거되기 전까지는 군사력을 앞세운 자주국방 달성을 위해 ‘당우위, 군우선주의’는 지속될 것이고, 미사일개발도 지속될 것이다. 따라서 김정일의 북한 군부대에 대한 현지지도도 지속될 것이다. 식량난 때문에 저하된 군의 사기진작을 위해 군에 대한 칭찬, 군에 대한 보급 우선, 군 일탈행위 묵인, 군·민일치 운동 강화 등과 같은 조치가 취해질 것으로 보인다.

넷째, 경제난 해결을 위해 ‘세속화’의 일환인 경제제도 개선에도 매진할 것으로 보인다. 분조관리제의 가족책임생산제로의 전환, 폐기발에 대한 세금완화, 농민시장의 거래품목 확대, 소규모 개인상행위 합법화, 이산가족 방문을 위한 해외여행 확대 등의 조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주체농법을 개선하여 농민의 선택 범위를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사회적으로 주민이동의 자유를 더욱 확대하고 정치적 목적이 아닌 각종 친목활동을 허용할 것으로 보인다. 통행증 없는 지역간 이동을 허용하고 남한 및 해외 가족·친지들과의 서신교환이나 전화통화도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

나. 장기적 전망

장기적 관점에서 보면 김정일의 전향적 행보는 관료와 주민들의 의식을 혼란에 빠뜨릴 가능성이 있다. 정치적 통제와 대외개방이 공존되기 때문이다. 물론 해외문물을 접할 수 있는 주민들은 개방에 대해 적극 찬성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장군님’의 선택에 대해 적극적인 반대를 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관료, 특히 군관료들의 개별적

인 불만표시 가능성은 상존한다.

첫째, ‘주체종교’ 유지 기조 하에 실용주의적 태도가 주요 생활기준으로 등장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당대회를 통해 중국처럼 ‘사회주의 초급단계론’과 유사한 노선이 도입될 가능성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북한식 개발독재’ 정책을 합리화하는 노선변경이 도입될 수도 있을 것이다.

둘째, 수령 유일지배체제는 지속될 것이다. 다만 수령제의 변형된 형태인 ‘왕정’이나 ‘종신대통령제’ 같은 제도가 도입될 가능성이 있다. 왕제를 채택하고 있는 아랍국가들처럼 김정일도 정치적으로는 ‘왕제’를,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를 선택할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당대회나 헌법수정을 통해 국방위원장 체제는 종식될 것이다. 한편 ‘김정일식 실용주의’ 노선에 대해 개인적 차원에서 반대할 인물이 등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김정일이 이러한 도전을 잘 제압하면 ‘북한의 등소평’이 되겠지만 그렇지 못하면 ‘북한의 고르바초프’가 될 것이다.

셋째, 북한군의 보수적 태도는 쉽게 변하지 않을 것이다. 빨치산의 후예임을 자부하는 군부는 ‘반제’노선을 고수할 것이고 주체사회주의 고수에 헌신할 것이다. 당연한 귀결이지만 수령후계자 김정일에 대한 충성심 또한 변함이 없을 것이다. 김정일의 개방 노선에 대한 반발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지만 개인적 차원에 머물 가능성이 있고 각종 통제장치로 인해 조직화·집단화되지는 못할 것이다.

넷째, 개방정책으로 인해 북한경제 회생이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북한경제 회생은 중앙통제경제의 강화로 이어질 수도 있지만 체제유지에 대한 자신감이 있을 경우 개방특구가 보다 활성화되고 세금제도의 부활을 통해 자본주의 기업이 등장할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상황이 확대되면 중앙통제경제는 형해화되고 자본주의식 경영방식이 도입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농촌에서는 개인농이 등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섯째, 북한주민들의 의식은 보다 개방적으로 변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개방적 분위기는 김정일 정권의 개방정책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주민들의 개방적 태도가 자유주의적 세력화로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이다.

VI. 결 론

북한체제에 대한 성격 규정은 논자에 따라 다양할 수 있을 것이다. 수령유일지배체제, 유격대국가, 전체주의국가 등이 대표적인 국가성격 규정이다. 그러나 북한은 이 보다 훨씬 강력한 국가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지도자는 신격화되었고 주민들은 신격화된 지도자를 무조건 믿고 따라야 한다. 이러한 이유에서 북한은 ‘주체종교국가’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수령 김일성은 ‘교주’이고 김정일은 ‘제2의 교주’이다. 주체사상은 ‘성서’이고 김일성과 김정일을 위한 노래는 ‘찬송가’이다. 권력엘리트들은 ‘사제’이고, 주민들은 ‘신도’이다. 따라서 신도인 주민들은 김일성 교리를 의심하면 안되고 절대로 믿어야 한다. 물론 북한의 ‘종교국가’적 체제는 특정한 종교적 색채만 내포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사회주의대가정’론, ‘육친적 배려,’ ‘아버이,’ 충성과 효성, 의리 등 ‘유교적’ 특징, ‘단군시조론,’ ‘김일성 민족,’ ‘수령복’ 등 ‘민족종교’적 측면, ‘총폭탄 정신,’ ‘21세기의 태양’ 등 일본 천황제에서 나온 군국주의적 요소 등이 혼재된 상태가 북한체제의 특징이다. 다만 공통적인 것은 모두 종교적 요소들이라는 점이다.

신권을 유지했던 김일성은 사망했지만 그의 후계자 김정일이 그 역할을 대행하고 있다. 김정일은 김일성 못지 않은 절대권을 유지하고 있다. 김정일의 절대성은 지난 정상회담과 그 이후 행해진 각종 정책에서 증명되었다. 김정일은 대남비방 중지, 6·25행사 중지, 이산가족 상봉, 주한미군 주둔 용인 등 기존의 사고로는 이해할 수 없는 파격적인 ‘교시’들을 쏟아 놓았다. 이것은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는 ‘신권적’ 권위가 아니면 불가능한 것 조치들이다.

종교화된 정치의 폐단은 경제난으로 나타났다. 심각한 경제난은 ‘산속의 종교’인 주체종교를 ‘세속화’하도록 만들고 있다. 즉 폐쇄된 공간에서 조용히 공동체 사회를 꾸미려던 김일성과 김정일의 구상은 경제난으로 인해 무너졌고 세속에 나와 식량을 구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자신들만의 ‘천년왕국’ 건설을 포기한 것은 아니다. 마지못해 세속화를 추진하면서도 고유의 종교사상인 ‘혁명적 수령관’은 더욱 강화시키고 있다. 세속화로 인한 신자들의 사상적 해이를 우려해서이다.

만일 비자발적인 세속화이기는 하지만 ‘신성화’와 ‘세속화’를 동시에 성공한다면 북한은 세속화에 박차를 가할 것이다. 특히 김정일은 폐쇄된 공간인 북한에서만 ‘구세주’가 아니라 모든 세속인들의 ‘구세주’가 되려 할 것이다. 북한은 정상회담을 김정일의 ‘은총’으로 받아들이고 그를 ‘21세기의 민족지도자’로 추앙하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일반적으로 종교정치는 체제통합 기능을 한다. 같은 종교정치일 경우 종교인들은 놀라운 통합을 이룬다. 이들은 슬픔, 고통, 외로움을 함께 공유하고 일탈자를 설득한다. 그러나 다른 종교에 대해서는 철저히 배타적이다. 자신들만이 정통이고 선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이단이고 악이라는 이분법적 사고가 지배한다. 그리고 그들은 통합을 위해 이단을 만들어 내고 이들을 공격함으로써 통합을 이룬다.

그 동안 북한은 주체종교국가의 가장 큰 위협세력으로 미국을 지목하여 왔다. 북한은 미국을 Satan으로 지목하고 어떻게 해서든 미국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려 노력하였다. 물론 그 방법은 초기단계에서는 무력이었으나 현재는 대화이다. 북한의 ‘사제들’은 미국의 위협만 사라지면 ‘천년왕국(강성대국)’이 도래 할 것으로 세뇌하여 왔고 신자들인 북한주민들은 그것을 그대로 신봉하고 있다. 남한에 대해서도 예외는 아니다. 북한은 남한을 ‘소악마’ 정도로 인식해 왔다. 따라서 통일이

되면 완전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의 행복은 주어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들이 통일을 열망하는 까닭도 여기에 있다.

결론적으로 북한이 종교국가처럼 주체사상으로 철저히 무장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다. 융합체의 중심에는 김정일이 핵심으로 자리잡고 있다. 김일성 사망에도 불구하고 김정일은 후임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다만 그들도 인정하다시피 ‘천년왕국’인 ‘강성대국’ 건설을 위해서는 ‘경제강국’ 건설이 급선무이기 때문에 부득불 ‘세속화’를 추진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북한은 부분개방을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매우 모험적인 일이기 때문에 매우 조심스럽게 시도하고 있다. 그 범위도 경제난 해결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러한 논리에서 북한은 경제난만 해결되면 언제든지 자신들만의 공동체인 ‘동굴속의 궁전’으로 돌아가려 할 것이다. 따라서 현재의 남북관계도 매우 ‘불안한 공존’인 것만은 분명하다. 다만 종교의 세속화는 반드시 부작용을 낳고 그것을 잘 극복하지 못할 경우 종교자체가 소멸된다는 점에서 북한의 희망사항 즉, 주체종교의 손상 없이 약점만 보완하는 ‘세속화’가 성공을 거둘 지는 미지수이다.

참 고 문 헌

1. 국내 자료

-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 『조중접경지역 현장조사 보고서』(2000년 7월 9일~16일)
- 박규식. 『김정일 평전』. 서울: 양문각, 1992.
- 서대숙. 『현대 북한의 지도자』. 서울: 을유문화사, 2000.
- 오경환. 『종교사회학』. 서울: 서광사, 1984.
- 와다 하루끼. 이종석 역. 『김일성과 만주항일전쟁』. 서울: 창작과비평사, 1992.
- 이극찬. 『정치학』. 서울: 법문사, 1986.
- 이상우 외. 『북한 40년』. 서울: 을유문화사, 1988.
- 이상우. 『북한정치입문』. 서울: 나남출판, 2000.
- 이원규. 『종교사회학』.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2000.
- 山本和. 이준식 역. 『政治와 宗教』. 서울: 한국기독교문화원, 1980.
- 임 은. 『김일성평전』. 서울: 옥촌문화사, 1989.
- 전현준. 『김정일 리더쉽 연구』.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4.
- _____. 『김정일정권의 권력엘리트 연구』.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5.
- _____. 『북한의 ‘강성대국’ 건설 실태 평가』.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9.
- 정창현. 『결에서 본 김정일』. 서울: 토지, 1999.
- 조영환. 『매우 특별한 인물 김정일』. 서울: 지식공작사, 1996.
- 진성계. 『김정일』. 서울: 동화연구소, 1990.
- 최원기·정창현. 『남북정상회담 600일』. 서울: 김영사, 2000.

통일부 정보분석국. 『북한동향』 주간 제471호 (2000.1.22~1.28)

『국민일보』. 2000.8.14.

『동아일보』. 2000.8.14.

『중앙일보』. 2000.8.14.

『한겨레신문』. 2000.8.14.

『연합뉴스』. 1997.12.25.

『월간 조선』. 2000년 8월호

『신동아』. 2000년 8월호

『말』. 2000년 8월호

2. 북한 자료

『김일성저작집 9』.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0.

사회과학출판사 편. 『주체사상총서 9: 령도체계』. 서울: 지평, 1989.

조선로동당출판사. 『인민의지도자 1』 제2판. 동경: 시대사, 1983.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3』.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7.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의 문헌집』.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

김일성. “사상사업에서 교조주의와 형식주의를 퇴치하고 주체를 확립
할데 대하여,” 조선로동당출판사. 『김일성저작집 9』. 평양: 조
선로동당출판사, 1980.

김정일. “온 사회를 김일성주의화하기 위한 당사상사업의 당면한 몇가
지 과업에 대하여(1974.2.19).”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3』.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7.

김정일. “주체사상교양에서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조선로동
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1986년 7월 15일),” 『친

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의 문헌집』.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

『김일성 헌법』

『조선로동당 규약 전문』

『로동신문』. 1982.4.1.

『로동신문』. 1999.6.1.

『로동신문』. 2000.6.19.

『중앙방송』. 2000.8.15.

3. 해외 자료

Bellah, Robert N., *Tokugawa Religion*, Ill. Glencoe: The Free Press, 1957.

Durkheim, Emile., *The Elementary Forms of the Religious Life*, trans., by Joseph Swain, New York: The Free Press, 1965.

Suh, Dae Sook, *Kim Il-Sung*,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88.